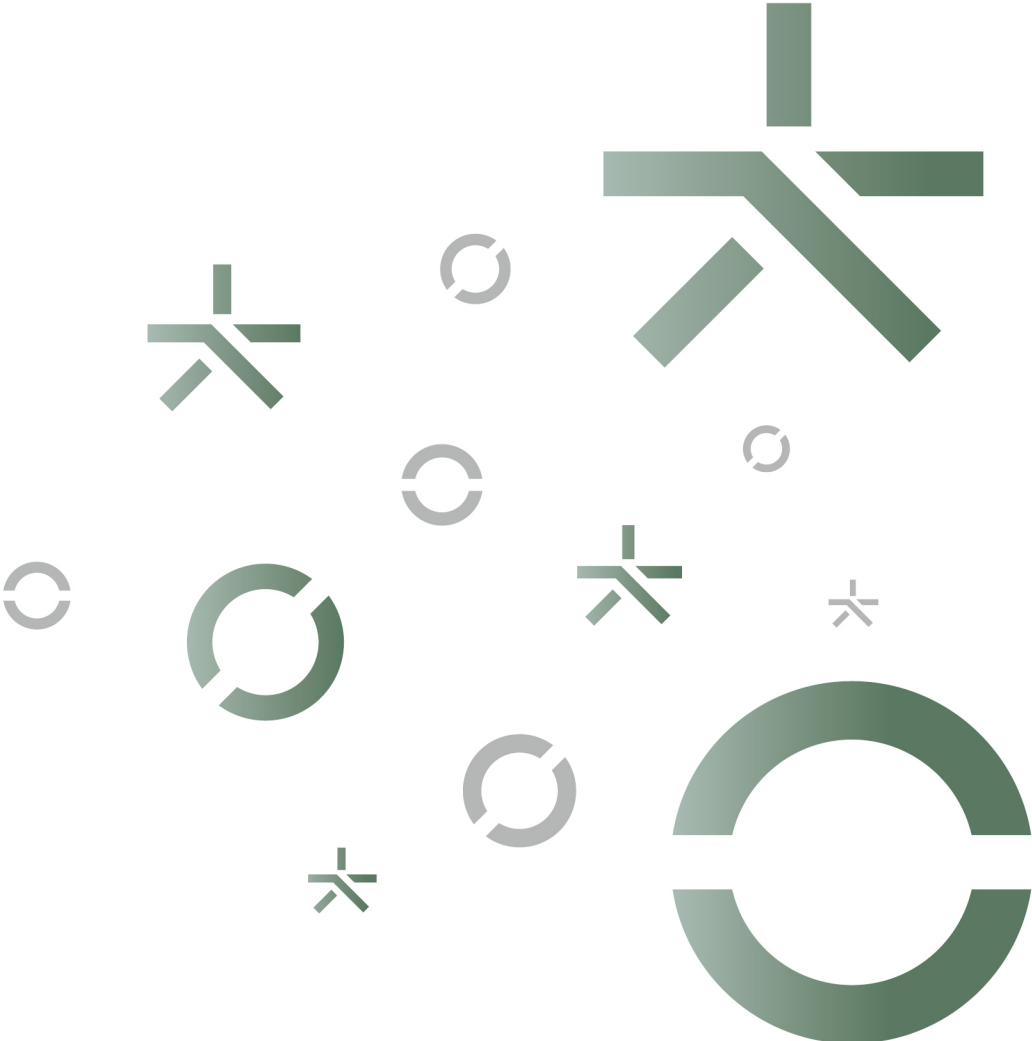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안승현·조성윤



연구책임

안승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조성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참여

신유진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김소영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 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 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

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

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지역위험 #재난안전의식 #정책신뢰 #시민실천 #정책수용성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목적	4
3. 연구범위 및 방법	4

2 이론적 고찰

1. 재난안전 의식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9
2.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과 정책 수용성	11
3. 정책 신뢰와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	12
4. 정책 수용성 이론과 통합적 분석 틀	14
5. 소결	16

3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분석

1.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의 개요 및 분석 틀	21
2. 분석 지표 구성 및 분석 방법	23
3.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	26
4. 군·구별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 비교 분석	30
5.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화 분석	31
6. 소결	34

4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1.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해석 및 유형별 형성 요인 분석	37
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42
3.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	61
4. 소결	69

5 결론

1. 연구 결과의 종합	73
2. 정책제언	75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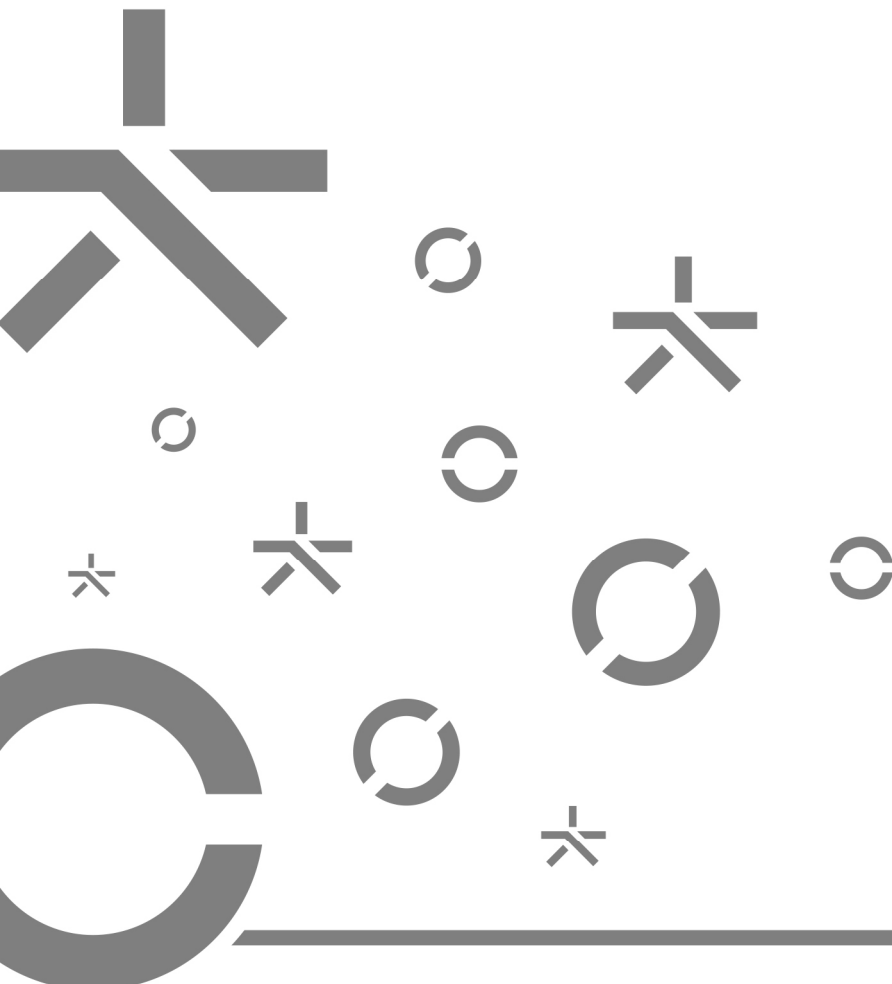
참고문헌	81
------------	----

[표 3-1] 분석 지표 활용 문항	23
[표 3-2]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 기술통계	26
[표 3-3] 주요 지표(시민 실천·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27
[표 3-4] 주요 지표(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28
[표 3-5] 응답자 특성별 재난안전 의식·시민 실천·정책 신뢰 평균	29
[표 3-6] 군·구별 재난안전 의식·시민 실천·정책 신뢰 평균	30
[표 3-7] 군·구 유형화 결과	33
[표 4-1] 군·구별 고령화율	40
[표 4-2] 군·구별 인구밀도 현황	41
[표 4-3]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43
[표 4-4]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실행 방향 예시	44
[표 4-5]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실행 방향 예시	44
[표 4-6]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실행 방향 예시	45
[표 4-7]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56
[표 4-8]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단계별 로드맵	58
[표 4-9] 인천광역시 군·구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	68

[그림 3-1] 주요 지표(시민 실천·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27
[그림 3-2] 주요 지표(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28
[그림 3-3]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 분포도	32
[그림 4-1]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로드맵	58
[그림 4-2] 재난안전 정책 우선순위 매트릭스	60

1

서론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재난의 대형화·복합화는 기존의 관 주도적 재난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재난이 일상적 위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 정책은 행정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재난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의 자생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과 일상 속 재난 대비 행동 간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함.
-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비상 물품 구비나 대피 훈련 참여 등 실천 단계로의 이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재난안전 정책 영역에서 인식과 실천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시간·비용·접근성 등 실천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실천 부담이 클 경우 행동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 중심의 접근을 넘어 시민의 정책 신뢰를 제고하고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전환이 요구됨.

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과 실제 실천 행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신뢰를 매개로 시민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첫째,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시민의 실천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 정책이 전제해 온 인식 제고를 통한 행동 변화라는 단선적 가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수용성 관점에서 실천 저해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석함.
- 둘째, 인천광역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과 실천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지역별 사회·환경적 맥락이 정책 수용성과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동일한 정책 수단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험 중심 학습, 행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하는 인천형 재난안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함.
 - 시민의 실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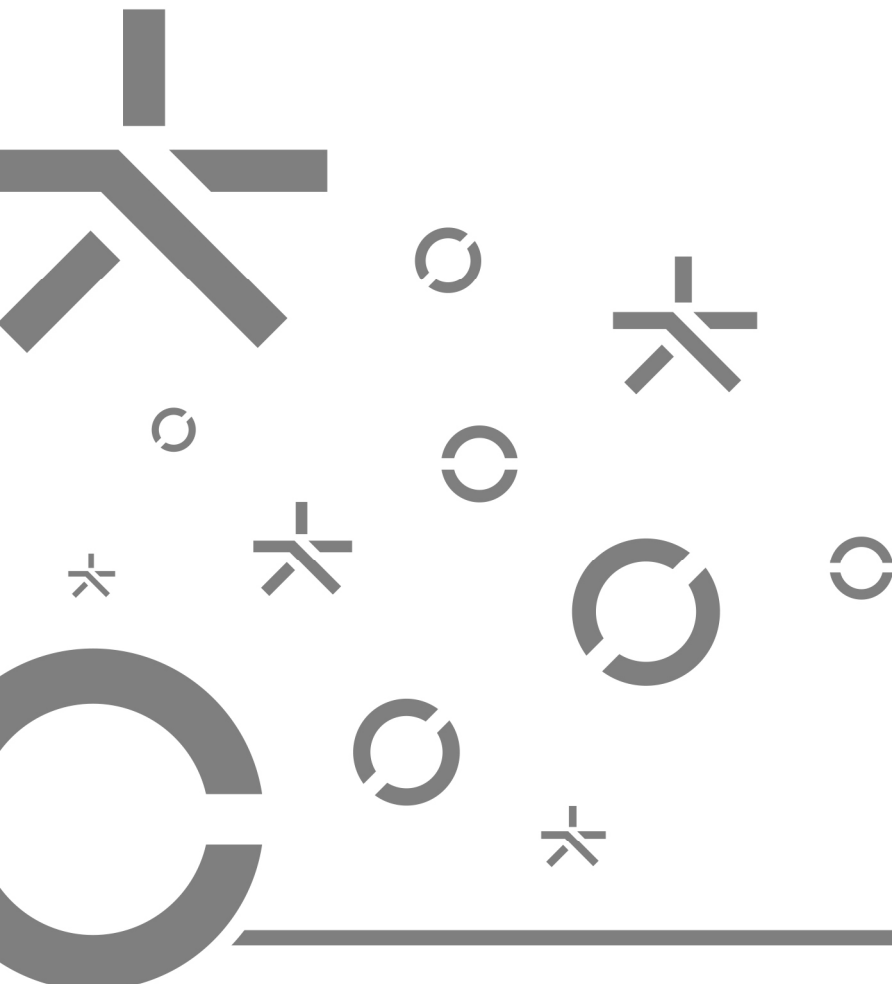
-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 내 전 지역으로 설정함.
- 시간적 범위는 연구 기간 내(~2025.12.)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함.
-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을 ‘재난안전 의식(인지)-정책 신뢰(태도)-시민 실천(행동)’의 연쇄 구조로 설정하고, 각 요소 간의 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위험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정책과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로, 시민 실천은 일상 속 재난 대비 행동과 정책 순응 행태로 정의함.

- 이들 요소 간의 관계를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닌 심리적 요인과 제도적 조건이 결합한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분석함.
- 이를 위해 위험 인식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분석 틀을 설정함.
- 실증 분석은 2024년 실시된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군·구별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정책 수용성의 차이도 함께 검토함.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재난안전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실증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 검토, 통계 분석,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음.
- 문헌 연구
 - 재난안전 의식,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함.
- 통계 분석
 -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 패키지인 SPSS 26.0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과 군·구별 특성 분류를 위한 기술통계 및 매트릭스 분석을 병행함.
- 전문가 자문
 -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유형별 실행 전략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제언 고도화를 시행함.

이론적 고찰



이론적 고찰

1. 재난안전 의식의 개념과 정책적 의미

-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 수준에 대하여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정의됨.
- 이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인 불안감이나 공포에 국한되지 않으며, 위험에 대한 인지, 정보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공공의 대응 체계에 대한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인식 구조를 포함함(Douglas & Wildavsky, 1983; Slovic, 1987).
- 위험 인식에 관한 초기 연구는 위험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확률과 피해 규모의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연구들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도 개인과 집단에 따라 다른 인식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Slovic(1987)은 심리측정 패러다임(psychometric paradigm)을 통해 위험 인식이 두려움(dread)과 미지성(unknown)이라는 인지적·정서적 차원에서 형성되며, 사람들이 객관적 확률보다 주관적 두려움과 통제 불가능성에 기반하여 위험을 평가한다고 설명함.
- 이러한 심리적 접근은 재난안전 의식이 단순한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인지 구조가 결합한 복합적 인식임을 시사함.
- 더 나아가 위험의 문화이론(Cultural Theory of Risk)은 위험 인식이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구조화된다는 점을 강조함(Douglas & Wildavsky, 1983).
- 이 관점은 재난안전 의식이 사회적 맥락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신뢰, 문화적 가치, 정책 환경이 위험 평가 과정에 체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함.

- 또한 Kasperson 등(1988)의 위험의 사회적 증폭 이론(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은 위험 정보가 미디어, 전문가, 정책 결정자 등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되거나 감소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난 안전 의식 역시 재난 그 자체의 경험보다 재난을 둘러싼 정보제공 방식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형성되는 경향을 강조함.
-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재난안전 의식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정책 환경과 제도적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적 인식 변수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은 단기적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정책의 성과 평가가 시민의 주관적 인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 재난 안전 의식은 정책 성과 평가의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하며, 정책 정보의 수용과 행동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임.
- 재난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공공의 대응 역량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정책적 권고나 안전 지침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함(Slovic et al., 2004).
- 이는 정책 시행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난안전 정책이 시민의 일상적 행동 변화와 지속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인식 수준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됨.
- 종합하면,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가 결합한 개념으로 재난안전 정책의 성과와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이 되며, 이러한 논의는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과 정책 신뢰, 시민 실천 및 정책 수용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함.

2.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과 정책 수용성

-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지니지만,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는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함.
- 재난 위험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과 조직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정책학에서 규제정책은 분배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해 갈등 가능성이 높고 정책 수용성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Lowi, 1972).
- 규제정책의 특성상 비용이 특정 대상에게 집중되는 반면, 편익은 사회 전체에 분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대상자는 직접적인 부담을 이유로 저항하거나 불순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재난안전 정책은 이러한 규제정책의 일반적 특성을 강화된 형태로 보여줌.
-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특성으로 인해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수반됨.
-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는 그 기능과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예방적 규제: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위험 발생 이전에 특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준을 설정하는 규제(예: 건축법상 내진 설계 기준,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행위 제한 규제: 특정 상황에서 시민의 활동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예: 재난 발생 시 통행 제한, 감염병 확산 시 영업 제한).
 - 의무 부과 규제: 시민이나 사업자에게 특정 행동을 의무화하는 규제(예: 안전교육 이수 의무, 안전 점검 시행 의무).
 - 결과 규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필요성이 체감되기 어려운 규제로 규제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 이러한 규제적 특성은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상시에는 시민의 체감도와 정책 수용성을 낮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음.
- 시민은 안전 투자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지만,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처럼 재난안전 정책의 규제적 성격은 정책 수용성 논의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킴.
- 정책 수용성은 단순한 찬반 태도를 넘어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 특히 위험을 다루는 정책 영역에서는 규제의 강도보다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정책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음(Bouckaert, Van de Walle, & Kampen, 2005).
- 즉,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은 규제 자체의 문제보다 규제가 시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는지에 좌우됨.
- 따라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시민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책 신뢰의 역할과 시민 실천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함.

3. 정책 신뢰와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

1) 제도적 신뢰와 정부 신뢰의 개념적 구분

- 정책 신뢰는 시민이 공공정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제도와 주체에 대해 갖는 신뢰 수준을 의미하며,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 집행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신뢰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포함함.
- 정책 신뢰를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신뢰(institutional trust)’와 ‘정부 신뢰(government trust)’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신뢰는 공공기관이나 제도가 사회문제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며, 특정 기관이나 제도의 역할 수행 역량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포괄함(Siegrist & Cvetkovich, 2000).
- 재난안전 분야에서 제도적 신뢰는 재난관리 체계의 안정성, 안전 기준의 합리성, 대응 매뉴얼의 전문성 등 제도 운영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반영함.

- 반면 정부신뢰는 현재의 정부 또는 정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신뢰를 의미하며,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기대를 포함함(Miller, 1974; Hetherington, 1998).
- 정부신뢰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의 성격을 지니며, 정부의 정책 방향, 책임성, 위기 대응 태도 등 정치적·규범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개념임.
- 재난안전 정책의 맥락에서 이 두 신뢰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함.
- 제도적 신뢰는 재난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믿음을 제공하며, 정부신뢰는 그러한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작동할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를 형성함.
-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정책이 범정부적 협력과 제도적 체계를 기반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신뢰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제도적 신뢰의 요소를 함께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을 취함.

2) 정책 신뢰가 재난안전 실천에 미치는 영향

- 위험 관리 영역에서 정책 신뢰는 시민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공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
- 정책 집행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시민은 위험 정보 자체를 의심하거나 정책 권고를 과도한 통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짐(Slovic, 1993).
- 반대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공식 정보에 대한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Siegrist & Cvetkovich, 2000).
- 신뢰가 형성되면 시민은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가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선별되고 정제된 것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고된 행동을 더 쉽게 실천하게 됨.
- 재난안전 실천은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안전 수칙 준수, 재난 대비 물품 준비, 위험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 이행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실천은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함.
- 기존 연구에서도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의 예방 행동과 정책 순응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Tyler, 2006; Earle, 2010).

- 특히 김수동·안승현(2025)의 연구는 정부신뢰가 재난안전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재난 두려움이 매개 역할을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음.
-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이 예방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시사함.
- 재난안전 정책이 사전 예방을 강조하는 특성상, 정책 신뢰는 시민이 단기적인 불편이나 비용을 감수하고도 재난안전 행동을 지속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함.

3) 정책 신뢰와 정책 수용성의 관계

- 정책 신뢰는 정책 수용성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음(Easton, 1965; Levi & Stoker, 2000).
- 재난안전 정책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시민은 정책을 강제적 통제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식하게 되며, 이는 정책 수용성과 시민 실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
- 이때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은 정책 수용성이 현실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실천 경험은 다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안전 체감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함.
- 따라서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정책에서 시민의 실천을 매개하여 정책 수용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이고 선행적인 변수로 기능함.

4. 정책 수용성 이론과 통합적 분석 틀

1) 정책 수용성의 개념과 구성 요소

- 정책 수용성(policy acceptance)은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를 넘어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수용하려는 전반적인 태도와 실천 의지를 포함하는 개념임.
- 재난안전 정책과 같은 위험 관리 영역에서는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정책 집행 주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정책 수용성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

- 정책 수용성 연구에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적 틀은 Grelle & Hofmann(2023)의 ‘공공정책수용 통합 프레임워크(Integrated Framework for Public Policy Acceptance)’이며, 이 프레임워크는 정책 수용성 형성 과정을 네 가지 단계적 경로를 통해 설명함.
 - 문제 인식(problem awareness): 시민이 특정 사회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지가 정부 개입에 대한 욕구를 형성하는 출발점.
 - 정부 지원 욕구(desire for governmental support):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신뢰(trust)와 가치적합성 등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정부 개입에 대한 지지를 강화함.
 - 정책 수용(policy acceptance): 제시된 정책 방안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단계로, 정책 효과성, 침입성(intrusiveness), 공정성 등이 영향을 미침.
 - 정책 순응(policy compliance): 수용된 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정책 수용성이 가시적인 성과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함.
- 이러한 통합 프레임워크는 정책 수용성이 일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문제 인식에서 행동 순응에 이르는 일련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의 결과임을 명확히 함.

2) 재난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 분석 틀

- 본 연구는 Grelle & Hofmann(2023)의 프레임워크와 재난안전 정책의 특수성을 결합하여,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정책 수용성을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로 통합한 분석 틀을 제시함.
- 재난안전 의식은 시민이 재난 위험과 정책 환경을 인식하는 출발점으로서 문제 인식 단계에 대응하며, 이는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으로 이어짐.
- 정책 신뢰는 재난안전 의식이 정책 정보 수용과 정책 지침 이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핵심 매개 변수로 작용하며, 정부 지원 욕구 단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기능함.
-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은 정책 신뢰를 토대로 형성된 행동 차원의 결과로서 정책 순응 단계에 대응하며, 정책 수용성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가시적인 형태임.
- 정책 수용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누적된 결과로 형성되는 종합적 개념으로, 정책 인식과 신뢰, 실천 경험이 통합된 상태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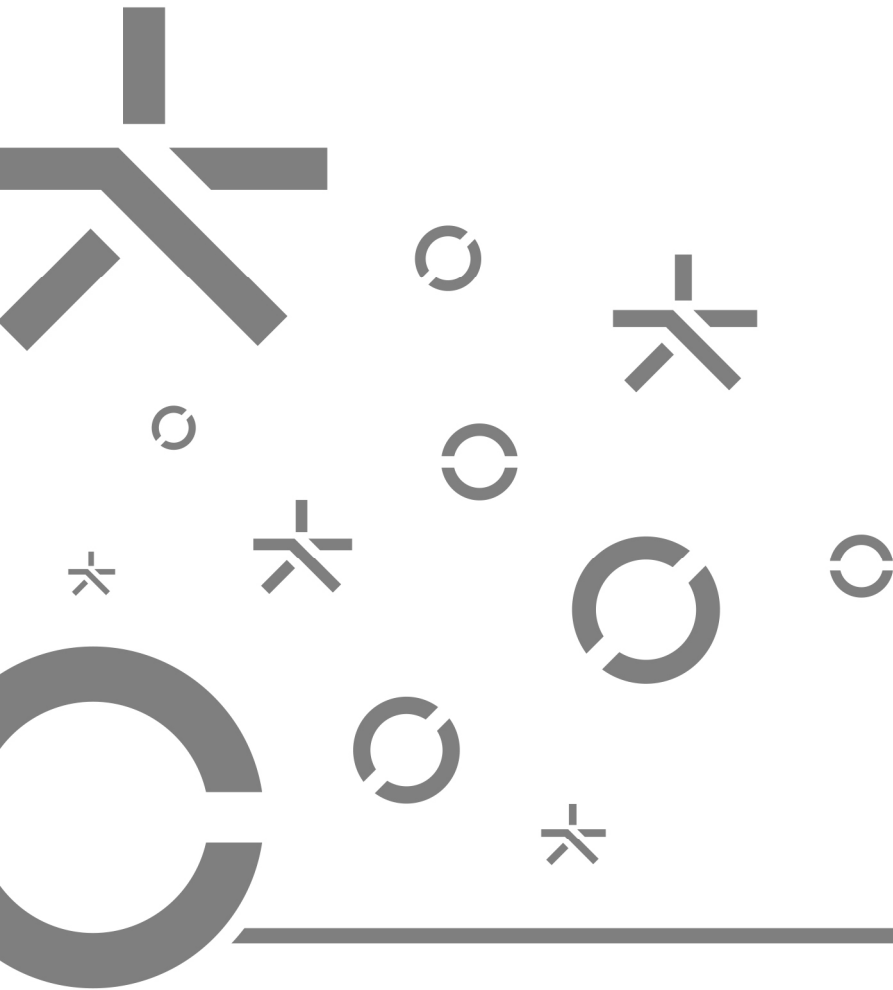
- 이러한 분석 틀에서 정책 수용성은 정책 효과를 설명하는 결과 변수인 동시에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기능함.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은 예방 중심, 규제적 성격, 불확실성을 내포한 위험 관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실천이 정책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를 가지며, 정책 수용성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됨.
- 이 통합적 분석 틀은 ‘재난안전 의식 → 정책 신뢰 → 시민 실천 → 정책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명하며, 재난안전 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함.

5. 소결

- 2장에서는 재난안전 정책의 특수성과 정책 수용성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음.
- 재난안전 의식은 재난 위험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정책 환경에 대한 평가가 결합한 개념으로, 정책 성과를 이해하는 핵심 분석 변수임을 확인하였음.
- 위험의 사회적 구성 이론 등을 통해 재난안전 의식이 객관적 위험 수준보다 사회적 맥락과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탐색하였음.
- 아울러 재난안전 정책은 사전 예방과 위험 관리에 초점을 두는 과정에서 규제적 성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규제적 특성은 정책 효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해 시민의 정책 수용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함.
-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는 제도적 신뢰와 정부 신뢰로 구분되어 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매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신뢰가 확보될 때 정책에 대한 수용성과 자발적 실천 가능성이 높아짐.
- 끝으로, Grelle & Hofmann(2023)의 공공정책수용 통합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재난안전 의식 → 정책 신뢰 → 시민 실천 → 정책 수용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음.

- 이 분석 틀은 정책 수용성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과 신뢰, 반복적인 실천 경험이 누적된 결과로 형성되는 종합적 개념이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행 조건임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음.
- 본 연구는 이 통합적 분석 틀을 토대로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과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분석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분석

1.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의 개요 및 분석 틀

-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군·구별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재난안전 정책은 예방 중심의 성격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과가 가시화되기 어렵고, 정책의 실효성은 시민의 체감과 일상적 행동(실천)을 통해 현실화하는 측면이 큼.
- 이에 본 장에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을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의 관계 속에서 지역별 정책 작동 양상을 해석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음.

1) 조사 개요 및 표본 설계의 특징

- 인천광역시는 2022년부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인식 수준과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며, 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인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안승현·조성윤, 2025).
-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재난안전 체감도, 재난안전 인식도, 재난안전 실천도, 공공 및 사회적 재난안전 신뢰도의 4개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음(안승현·조성윤, 2025).

-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는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의 의뢰로 현대리서치가 수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거주 만 14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 인천광역시 거주 만 14세 이상 시민
 - 표본 크기: 1,000명(군·구별 인구 비례 할당 및 최소 표본 확보 병행)
 - 조사 기간: 2024년 10월 25일~11월 8일(15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및 개별 면접조사 병행
 - 표집 방법: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한 비례 할당 표집(과소표집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동구에 대해서는 30표본 최소 표본 할당 시행)
 - 신뢰 수준: 95%
 - 표본오차: $\pm 3.10\%p$
- 표본 배분은 군·구별 인구 비례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강화군, 옹진군) 및 특정 지역(동구)의 경우 군·구 단위 비교 분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표본 수(각 30명)를 확보하는 방식(최소 표본 할당)을 병행하였음.
 - 이는 지역 비교라는 정책적 활용 목적을 고려한 설계이지만, 동시에 소표본 군·구 결과에는 통계적 변동성이 내재함.
- 따라서 본 장에서 제시되는 군·구별 분석 결과는 기계적인 서열화가 아니라, 지역 간 차이의 존재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의 방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해석하였음.
- 특히 최소 표본이 적용된 군·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일반화를 지양하고, 유형화 결과 역시 정책 설계 시 추가 점검이 필요한 신호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둠.

2) 분석 방향

- 본 연구의 분석 틀은 2장에서 제시한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정책 수용성’의 연결 구조를 실증적으로 점검하는 데 기반함.

- 구체적으로 ① 재난안전 의식 수준, ② 정책 집행 주체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정책 신뢰 수준, ③ 예방·대응 행동의 시민 실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④ 이들 지표의 조합이 군·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유형화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접근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본 장의 분석은 정책 수용성을 단일 지표로 직접 측정하기보다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의 결합을 통해 나타나는 정책 작동 구조의 결과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

2. 분석 지표 구성 및 분석 방법

1) 분석 지표의 구성 원칙

- 본 장의 핵심 분석 지표는 다음의 세 영역으로 구성하였음.
 - 첫째, 재난안전 의식 지표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수준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필요성 인식의 출발점 변수로 활용하였음.
 - 둘째, 정책 신뢰 지표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권고 및 규제 수용 기반을 나타내는 핵심 요인으로 활용하였음.
 - 셋째, 시민 실천 지표는 사전 대비, 안전 수칙 준수, 정보·행동 요령 인지 및 행동 의향 등 일상에서 수행되는 재난안전 관련 행동 수준을 반영하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정책 효과가 행동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측정하였음.
- 각 영역별로 활용한 의식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표 3-1] 분석 지표 활용 문항

구분	문항	내용	비고
재난안전 인식도	문10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종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1	귀하는 인천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특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2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13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구분	문항	내용	비고
	문14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비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5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절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6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개인적 책임감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5점 척도
	문17	귀하는 우리 사회가 재난안전을 얼마나 중시한다고 느끼십니까?	5점 척도
	문18	귀하는 지역사회의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19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한 정부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재난안전 실천도	문20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가족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1	귀하는 가정 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2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대비 물품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5점 척도
	문23	귀하는 재난 경보를 받으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4	귀하는 재난 발생 시 가까운 대피소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3점 척도 (역코딩)
	문25	귀하는 평소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 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문26	귀하는 재난 및 사고유형별(자연재난, 사회재난, 생활안전 등)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5점 척도
	문27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28	귀하는 주변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십니까?	4점 척도
재난안전 신뢰도	문30	귀하는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1	귀하는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5점 척도
	문32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5점 척도
	문33	귀하는 현재 인천시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구분	문항	내용	비고
재난안전 신뢰도	문34	귀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인천시의 공공 서비스(구조, 지원 등)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5	귀하는 사회적 안전망(경찰, 소방 등)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5점 척도
	문36	귀하는 인천시 내에서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의 기초질서 준수가 안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문38	귀하가 체감하는 인천시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어떻습니까?	5점 척도
	문39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와 관련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운(2025).

- 지표는 개별 문항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정책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항을 묶어 합성지표(composite index)로 구성하였음.
- 이는 개별 문항의 측정 오차를 완화하고, 지역 비교 및 유형화라는 본 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효함.

2) 척도 통일 및 지표 산출 방식

- 조사 문항에 3점, 4점, 5점 척도가 혼재되어 있어 지표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관련 문항을 5점 척도로 선형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음.
- 선형 변환은 각 문항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상대적 간격을 유지하도록 적용하였으며, 변환 공식은 다음과 같음.

$$\text{변환값} = \left[\frac{\text{원점수} - \text{원척도최솟값}}{\text{원척도최댓값} - \text{원척도최솟값}} \times 4 \right] + 1$$

- 최종 지렛값은 변환된 문항들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였음.
- 절측값은 문항 단위에서 제외한 후 개인 단위 평균을 산출했으며, 군·구 단위 평균은 개인 단위 지표의 평균으로 산출하였음.
- 최소 표본이 적용된 군·구의 경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므로, 군·구별 비교 및 유형화 해석 시 해당 조건을 함께 고려하였음.

3) 분석 절차

- 분석은 다음 순서로 수행하였음.
 -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을 기술통계로 정리하여 인천시민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였음.
 - 둘째, 군·구별 평균 비교를 통해 지역 간 차이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하였음.
 - 셋째, 정책 활용성을 고려하여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을 핵심 축으로 하는 사분면 유형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군·구별 정책 작동 양상을 구조화하였음.
 - 끝으로, 경계선 인접 군·구 및 최소 표본 군·구에 대해서는 기준선 설정 방식의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가 민감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해석의 유의사항에 반영하였음.

3.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

1) 전체 응답자의 기술통계

-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의 평균 및 분포를 정리한 결과, 시민들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에 비해 시민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표 3-2]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 기술통계

구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재난안전 의식 (재난안전 인식도)	1,000	1.0	5.0	3.489	.514
시민 실천 (재난안전 실천도)	1,000	1.2	5.0	2.968	.653
정책 신뢰 (재난안전 신뢰도)	1,000	1.0	5.0	3.384	.565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재난안전 의식은 평균 3.489점, 정책 신뢰는 3.384점, 시민 실천은 2.968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인식(3.489점)과 실천(2.968점) 간에는 0.521점의 차이가 관찰됨으로써 인식-행동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함.

- 이는 시민들이 재난 위험과 정책 필요성을 일정 수준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상적 행동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2) 지표 간 관계

- 지표 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 ($r=0.495$, $p<.01$)가 관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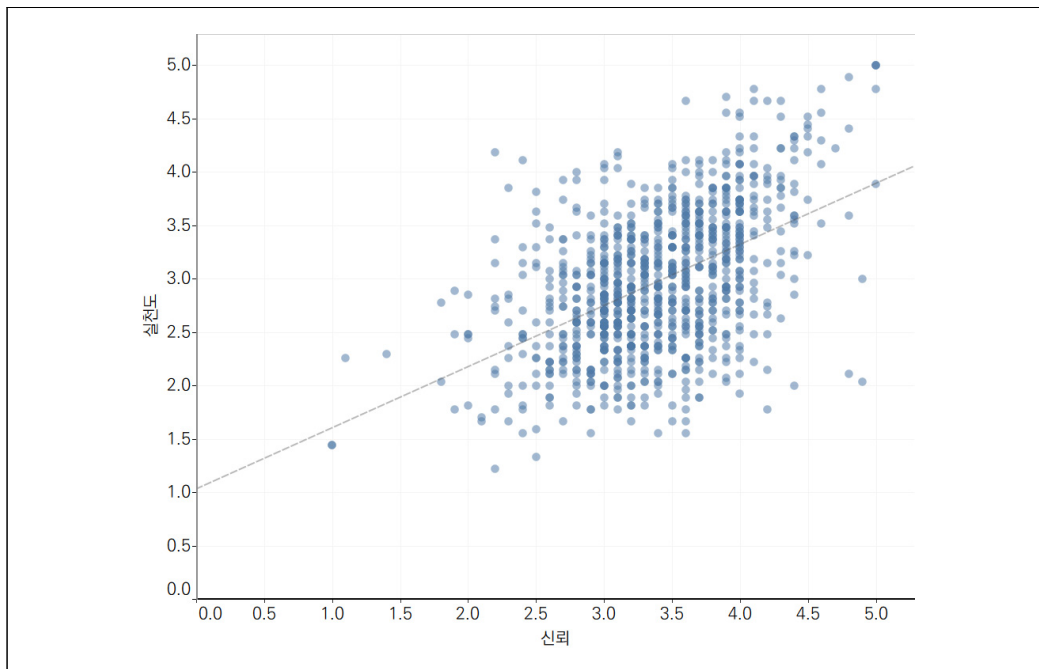
[표 3-3] 주요 지표(시민 실천·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N	시민 실천	정책 신뢰
시민 실천	Pearson 상관계수	1	.495**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정책 신뢰	Pearson 상관계수	.495**	1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 $p<.01$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1] 주요 지표(시민 실천·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이는 정책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 실천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2장에서 제시한 신뢰가 실천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정책 수용성 논의를 실증적으로 보완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재난안전 의식과 정책 신뢰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r=0.534$, $p<.01$)가 확인되어, 위험을 크게 인식할수록 정책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 평가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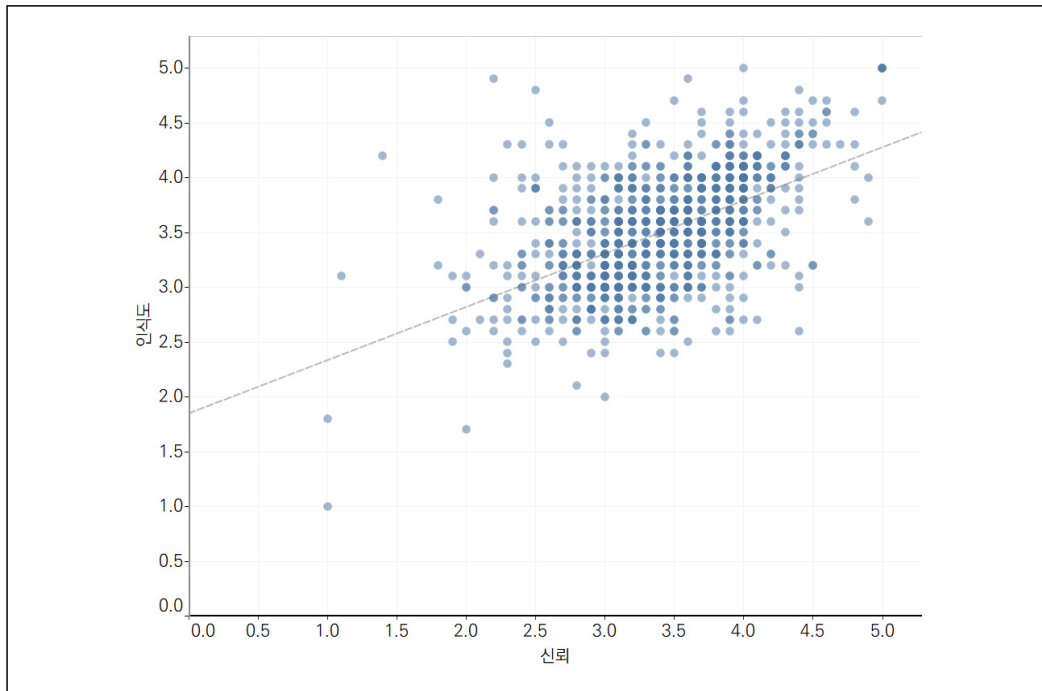
[표 3-4] 주요 지표(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N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재난안전 의식	Pearson 상관계수	1	.534**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정책 신뢰	Pearson 상관계수	.534**	1
	유의확률(양쪽)	.000	
	N	1,000	1,000

** $p<.01$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3-2] 주요 지표(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다만 본 절의 상관관계 결과는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이후 4장에서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도출 시 정책 설계의 우선순위와 개입 지점을 설정하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3) 응답자 특성별 분포

- 응답자 특성별 분석에서는 연령, 거주 기간, 주거형태 등에 따라 정책 신뢰 및 시민 실천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음.
- 예컨대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기간이 길수록 두 지표가 높아지는 경향도 관찰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군·구별 비교 결과를 해석할 때 단순히 지역 효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 구성과 생활 여건의 차이가 함께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3-5] 응답자 특성별 재난안전 의식·시민 실천·정책 신뢰 평균

구분		재난안전 의식	시민 실천	정책 신뢰
연령	14~16세	3.53	2.95	3.77
	17~19세	3.59	2.81	3.55
	20대	3.50	3.11	3.39
	30대	3.40	2.88	3.25
	40대	3.52	3.05	3.37
	50대	3.50	2.94	3.36
	60대 이상	3.49	2.93	3.42
거주 기간	5년 이하	3.48	2.92	3.27
	6~10년	3.50	3.04	3.38
	11~15년	3.53	3.10	3.53
	16~20년	3.55	3.01	3.44
	21년 이상	3.47	2.92	3.36
거주 공간	단독 주택	3.47	2.96	3.57
	아파트	3.50	2.99	3.38
	연립/다세대 주택	3.45	2.87	3.29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운(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4. 군·구별 재난안전 의식·정책 신뢰·시민 실천 비교 분석

- 군·구별 비교 분석 결과,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 수준은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군·구에서는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관찰됐지만, 다른 군·구에서는 인식 수준에 비해 실천 수준이 낮거나 정책 신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양상이 나타났다.
- 이는 동일한 재난안전 정책이 지역별 정책 접점 경험, 정보 접근성, 생활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고 행동 전환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최소 표본(각 30명) 확보 방식이 적용된 군·구(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평균값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군·구의 결과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을 탐색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기계적인 순위화나 단정적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도명록, 2025a).

[표 3-6] 군·구별 재난안전 의식·시민 실천·정책 신뢰 평균

구분		재난안전 의식	시민 실천	정책 신뢰
거주지	중구	3.60	3.10	3.35
	동구	3.47	3.08	3.44
	미추홀구	3.44	2.80	3.28
	연수구	3.56	3.06	3.44
	남동구	3.51	3.05	3.40
	부평구	3.43	2.93	3.27
	계양구	3.52	2.94	3.33
	서구	3.50	3.03	3.44
	강화군	3.27	2.54	3.60
	옹진군	3.50	2.86	3.74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본 절에서는 군·구별 차이의 존재와 범위만 확인하고, 차이의 구조적 해석은 유형화 분석을 통해 구체화하였음.

5.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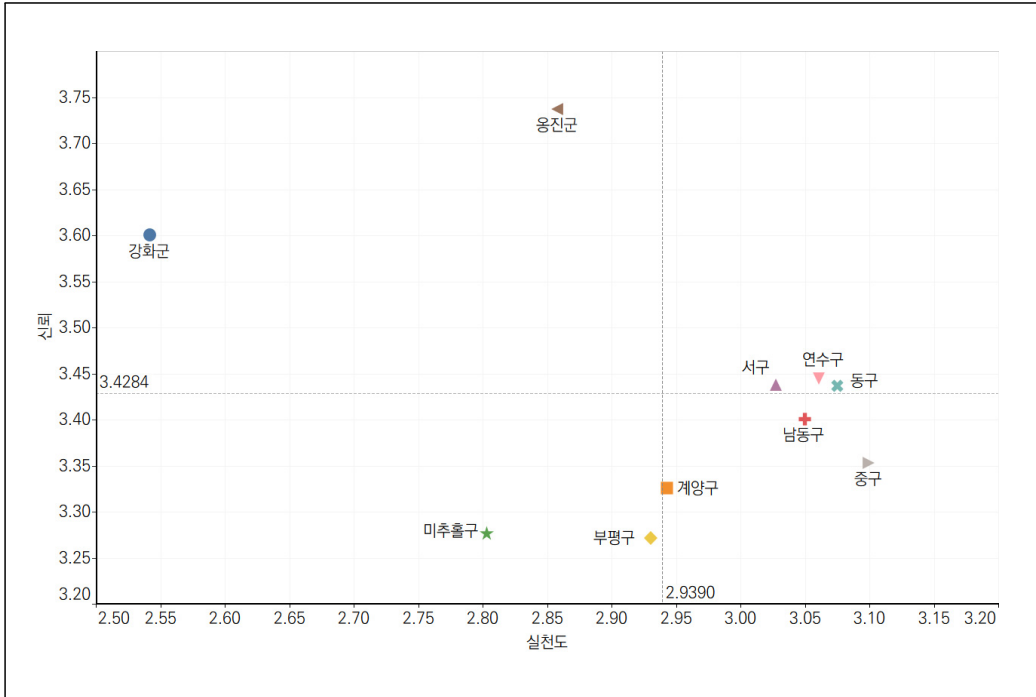
1) 유형화의 필요성과 기준선 설정

- 군·구별 평균값 비교는 지역 간 차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정책 개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도명록, 2025a).
- 이에 비해 유형화 분석은 개별 지표의 높고 낮음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표 간 결합 양상을 통해 군·구별 정책 환경을 구조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음.
- 특히 사분면 유형화는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결정자와 실무자가 지역별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동일한 정책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음.
- 본 연구에서 유형화의 기준선은 개인 응답 수준의 전체 평균이 아니라, 군·구 간 상대적 위치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군·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 이는 본 분석이 개별 시민의 평균적 인식이나 행동 특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군·구 단위에서 재난안전 정책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별 정책 수용과 실천 여건에 어떤 구조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임¹⁾²⁾.
- 이러한 분석 목적에 따라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의 기준선은 전체 군·구 평균값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 신뢰도는 3.4284점, 시민 실천도는 2.9390점을 기준으로 각 군·구의 상대적 위치를 사분면에 배치하였음.
- 이를 통해 각 군·구가 상대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이 모두 높은 유형인지, 또는 한쪽 지표에 비해 다른 지표가 취약한 유형인지를 체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군·구별 정책과제 도출과 실행전략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 개인 응답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평균값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개인 단위 평균과 군·구 단위 평균이라는 분석 단위(level of analysis)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의 유형화는 군·구 간 정책 작동 양상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군·구 평균값을 기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분석 목적에 부합함.

2) 다만 기준선이 평균값에 기반하고 있는 관계로 경계선에 인접한 군·구의 경우 소폭의 수치 변화에 따라 유형 분류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따라서 유형화 결과는 기계적인 구분이나 서열화로 해석하기보다는 각 군·구가 처한 정책 환경과 개입 필요성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 군·구 유형 분포도



자료(출처) : 안승현·조성윤(2025)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유형별 구분과 해석

- 유형화 결과, 인천광역시 10개 군·구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서로 다른 정책적 과제를 내포함.
- 첫째, 고신뢰·고실천형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시민 실천이 함께 높은 유형으로, 재난안전 정책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유형은 현 수준의 유지와 함께 우수한 정책 접점 및 실천 확산 요인을 파악하여 다른 지역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고신뢰·저실천형은 정책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시민 실천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는 유형으로,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유형은 실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실행 기반(접근성, 편의성, 참여 동기 등)을 점검하고, 실천 전환을 강화하는 방향의 전략 설계가 필요함.

- 셋째, 저신뢰·저실천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정책의 체감 및 행동 전환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점검과 개입이 필요한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유형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서 신뢰 기반 강화와 실천 촉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됨.
- 넷째, 저신뢰·고실천형은 시민 실천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정책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으로, 시민의 자발적 행동이 제도적 신뢰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 이 유형은 정책 설계·집행 과정의 설명 책임, 소통, 참여 채널을 강화하여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3-7] 군·구 유형화 결과

유형	명칭	정책 신뢰	시민 실천	군·구	정책적 과제
I	고신뢰·고실천형	높음	높음	동구, 연수구, 서구	정책의 유지 및 우수사례 확산 취약 영역 보완 중심의 접근
II	고신뢰·저실천형	높음	낮음	강화군, 옹진군	실행 장벽(비용, 접근성, 정보전달 등) 완화를 통한 실천 촉진
III	저신뢰·저실천형	낮음	낮음	미추홀구, 부평구	신뢰 회복, 인식 제고, 실천 촉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우선 개입 대상
IV	저신뢰·고실천형	낮음	높음	중구, 남동구, 계양구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실천-신뢰 연결 구조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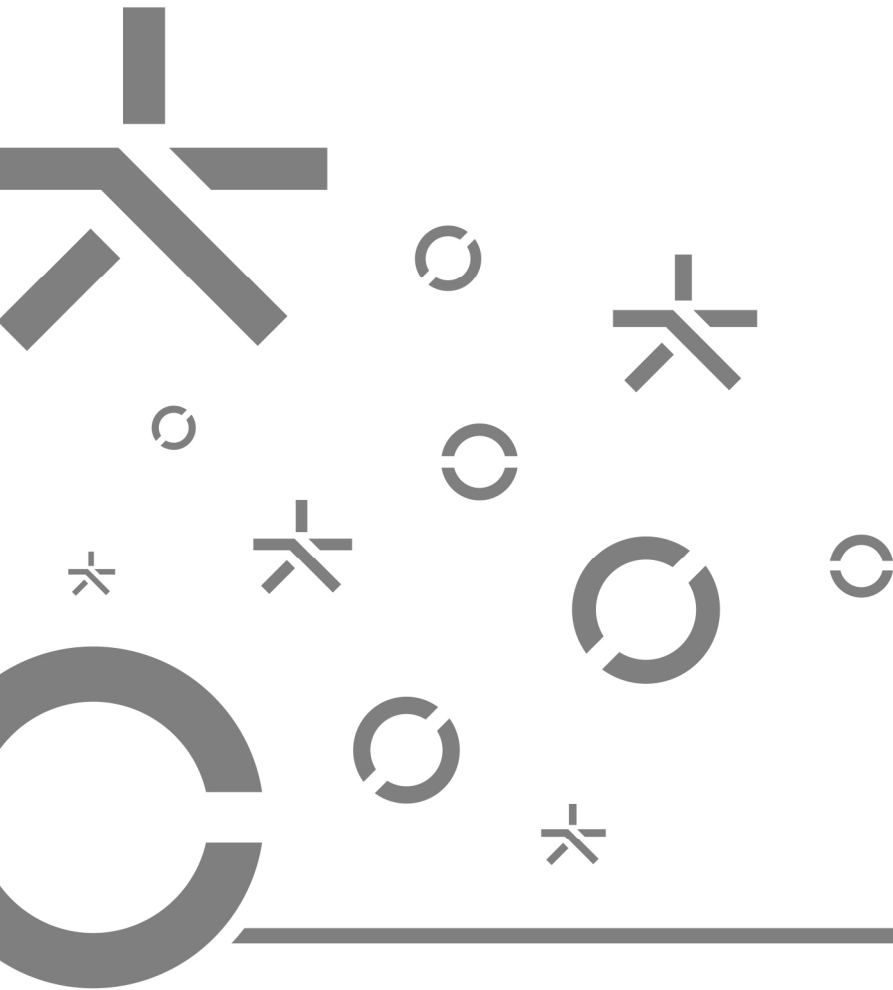
자료(출처) : 저자 작성.

- 유형화 결과는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구조화 도구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해석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함.
 - 첫째, 기준선 설정 방식의 특성상 경계선 인접 군·구는 유형 분류가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정책 설계 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최소 표본 확보 방식이 적용된 군·구는 표본 특성에 따라 평균값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군·구의 유형 분류는 과도한 일반화를 지양하고 표본 확대나 보조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후 보완 분석이 요구됨.
 - 셋째, 유형화는 원인 규명이 아니라 정책 접근 방향의 구조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 여건과 결합한 설명은 해석의 수준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소결

- 본 장에서는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난안전 의식, 정책 신뢰, 시민 실천의 분포 특성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군·구별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3.489점)에 비해 정책 신뢰(3.384점)와 시민 실천(2.968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위험 인식 및 정책 필요성 인식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행동 전환이 충분히 동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의 유의미한 정(+)의 관계($r=0.495$, $p<.01$)는 정책 신뢰가 시민의 실천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2장에서 제시한 정책 수용성 논의를 지역 단위 분석에서 재확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연령, 거주 기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신뢰 및 실천 수준이 달라지는 경향 또한 확인되어 지역 맞춤형 전략 설계 시 대상 집단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군·구별 차이에 대한 정책적 해석을 위해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의 사분면 유형화를 적용한 결과, 군·구별로 서로 다른 정책 작동 양상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입 방향과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다만 최소 표본 확보 방식이 적용된 군·구 및 경계선 인접 군·구는 유형 분류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본 장의 결과는 다음 장에서 실행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근거이자 점검 신호로 활용하고자 함.
-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전체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군·구 유형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한 맞춤형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자 함.
- 특히 유형별로 정책 설계와 소통 방식, 실행 기반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1.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해석 및 유형별 형성 요인 분석

1) 분석 결과의 정책적 의미

- 3장의 실증 분석 결과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줌.
-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 수준(3.489점)에 비해 시민 실천 수준(2.968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인식의 제고가 곧바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 특히 정책 신뢰도(3.384점)와 시민 실천도(2.968점) 간의 격차는 일정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정책을 교육과 홍보 중심으로 접근해 온 기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며, 재난안전 지식과 정보는 시민의 인지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는 이바지할 수 있으나, 실제 실천은 개인이 체감하는 위협의 수준, 정서적 불안, 일상생활 속 제약 조건 등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Slovic, 1987).
- 재난안전 의식의 제고는 교육이나 홍보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제도·인프라·규제·지원 체계가 함께 작동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남(오윤경, 2025).
- 이는 향후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한편,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0.495$, $p<.01$)가 확인된 점은 정책 수용성 제고의 핵심 기제가 제도적 신뢰의 형성에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함.
- 즉, 시민이 행정기관의 정보제공과 대응 역량을 신뢰할 때 공공의 권고는 더 쉽게 수용되며, 이는 일상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함(김수동, 2025).
- Tyler(2006)의 절차적 정의 이론 역시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방향의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군·구 유형별 형성 요인 분석

- 앞서 제시한 정책 신뢰도-시민 실천도 기반의 사분면 유형화 결과는 각 군·구가 처한 사회적, 공간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 재난안전 정책이 서로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차이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지역별 인구 구조, 물리적 환경, 재난 경험, 행정 접점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I 유형: 고신뢰·고실천형 (동구, 연수구, 서구)

- I 유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정책 작동 양상이 관찰됨.
- 연수구와 서구 등 일반적인 신도시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처럼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여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음.

- 동구의 경우 원도심이라는 물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책 수용성이 유지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다만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탐색적 수준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이는 Putnam(2000)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지역 내 신뢰와 네트워크, 상호 호혜성이 유지될수록 공공정책에 대한 제도적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공동체 차원의 실천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임.
- 신도시 지역에서는 체계적인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이, 원도심 지역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상호 감시와 협력이 각각 실천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울러 행정 정보의 전달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 역시 정책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II 유형: 고신뢰·저실천형 (강화군, 옹진군)

- 강화군과 옹진군은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지만, 시민 실천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에 해당함.
- 이들 지역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어 교육 참여나 대비 활동에 필요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위험 인식 자체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거리, 교통 여건, 디지털 접근성 등의 제약이 실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상혁, 2025).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실행 가능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 정책에 대한 태도와 신뢰는 긍정적이나, 실제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각된 통제감이 낮아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II유형의 실천 저조는 정책 수용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 실행 여건의 한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표 4-1] 군·구별 고령화율

지역	인구(명)	65세 이상 고령자(명)	고령화율(%)
전체	3,078,426	497,057	16.15
중구	163,728	24,912	15.22
동구	60,438	15,240	25.22
미추홀구	417,590	79,880	19.13
연수구	409,234	47,731	11.66
남동구	504,601	85,478	16.94
부평구	509,601	87,260	17.12
계양구	283,822	47,042	16.57
서구	638,608	77,384	12.12
강화군	70,034	25,691	36.68
옹진군	20,773	6,439	31.00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25).

(3) III 유형: 저신뢰·저실천형 (미추홀구, 부평구)

-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은 유형으로, 원도심 노후화와 높은 인구 밀집도가 주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반복적인 침수나 화재와 같은 생활안전 사고 경험은 주민들에게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을 누적시키며, 이는 제도적 신뢰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동규, 2025).
- Slovic(1987)의 위험 인식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경험이 반복되면 개인은 위험을 과대 인식하거나, 반대로 무력감과 체념으로 인해 행동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지역의 낮은 실천 수준은 단순한 무관심이라기보다 정책에 대한 기대 상실과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약화,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비중 증가 등 구조적 요인 역시 공동체 기반의 실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4-2] 군·구별 인구밀도 현황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인구밀도
전체	1,067.09	3,078,426	2,885
중구	140.38	163,728	1,166
동구	7.25	60,438	8,336
미추홀구	24.84	417,590	16,811
연수구	56.19	409,234	7,283
남동구	57.45	504,601	8,783
부평구	32.01	509,601	15,920
계양구	45.57	283,822	6,228
서구	119.06	638,608	5,364
강화군	411.41	70,034	170
옹진군	172.95	20,773	120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2025).

(4) IV유형: 저신뢰·고실천형 (중구, 남동구, 계양구)

- 중구, 남동구, 계양구는 시민 실천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정책 신뢰가 낮은 유형에 해당함.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대규모 위험 시설이 인접한 지역 특성상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와 무관하게 개인 차원의 대비와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실천은 제도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반복된 위험 경험에 기반한 자생적 대응 전략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정지범, 2025).
- Bachmann과 Zaheer(2006)의 신뢰 유형 구분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지역은 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제도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며,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이나 소통 부족은 행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IV유형에서는 정책의 내용보다는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유형별 차별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

-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방식의 홍보나 교육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군·구별로 정책 작동의 취약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 정책 신뢰가 낮은 지역(Ⅲ유형, Ⅳ유형)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
- 반면 실천 수준이 낮은 지역(Ⅱ유형, 일부 Ⅲ유형)에서는 교육이나 홍보 이전에 실행 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체감형 정책 수단이 요구됨.
- 고신뢰·고실천형 지역(Ⅰ유형)의 경우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유형별 차별화 접근은 한정된 행정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인천시 전체의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과 회복력을 단계적으로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
-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유형별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2.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1) 기본 방향 및 원칙

(1)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은 행정의 대응 역량 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수용과 협력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큼.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은 예방 중심의 성격상 성과가 즉시 가시화되기 어렵고, 정책 효과가 시민의 일상적 행동인 실천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시민-행정 간 상호작용 구조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과 행정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류현숙, 2025).

- 기존 재난안전 정책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중심 모델로 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으나, 인식 수준과 실천 수준 간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홍보 중심 접근만으로는 행동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 모델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함께 조정하는 접근이 요구됨.
- 이를 정책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3] 재난안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구분	기존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정책 방향	정부 → 시민 (일방향)	정부 ↔ 시민 (쌍방향)
정책 초점	예방·대응 중심	예방·대응 + 신뢰 구축 + 참여
정보제공	단순 전달	투명한 공개 + 설명 책임
신뢰 형성	정부신뢰 전제	정부신뢰 형성 과정 중시
실천 유도	교육·홍보 중심	장벽 제거 + 동기 부여

자료(출처) : OECD(2016), 류현숙(2025), 이동규(202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기본 방향

- 군·구 유형 분석에서 드러난 공통된 문제는 첫째, 인식과 실천 사이의 구조적 격차, 둘째, 정책 신뢰의 불균등, 셋째, 지역·계층 간 접근성의 차이임.
- 인식은 비교적 높음에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 정책의 내용보다 과정에 대한 불신, 도서·취약계층의 실행 여건 부족은 서로 다른 현상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결정 방식, 시민참여의 수준, 정책 전달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단일 프로그램이나 개별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이러한 공통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상위 수준의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인식과 실천의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재난안전 분야의 정책 과정 전반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근거 기반(Evidence-based)의 투명한 행정

- 시민이 정책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위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위험의 수준과 정책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데이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동규, 2025).
- Tyler(2006)가 절차적 정의 이론에서 강조한 것처럼 시민은 정책 성과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제도적 신뢰 형성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함.
-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중요함.

[표 4-4]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실행 방향 예시

- 군·구별 및 재난유형별 재난 위험 정보의 공개
- 주요 사업 도입 시 비용-편익 분석 또는 기대효과-대안 비교 공개
-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및 정책 설계 근거의 시각화 제공(인포그래픽, 대시보드 등)
- 정책 결정 과정(문제 인식 → 대안 검토 → 우선순위 → 집행 → 평가)의 단계별 공개 등

자료(출처) : 저자 작성.

②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 정책 수용성은 정책 내용 못지않게 정책 과정에서의 참여 경험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이동규, 2025).
- Putnam(2000)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신뢰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체적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수용 기반을 확대하는 경로가 됨.
- 따라서 시민을 정책 수혜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의제 설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4-5]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실행 방향 예시

- 군·구 및 지역사회 단위 재난안전 협의체(주민대표, 전문가, 행정) 구성 및 정례적 운영
- 시민 재난안전 모니터단 운영 내실화와 처리 결과의 피드백 체계화
- 정책 우선순위 설정 시 시민 의견 반영(설문, 공청회, 토론회 등)
- 주민참여예산제의 재난안전 분야 적용 확대 및 활성화 등

자료(출처) : 저자 작성.

③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 획일적 홍보·교육은 시민의 생활 조건과 실행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이 태도나 인식뿐만 아니라 ‘지각된 행동 통제감’, 즉 실행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취약 지역과 계층을 포함하여 실행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생애주기·거주환경·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한 차별화된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4-6]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실행 방향 예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내실화
- 지역 특성 기반의 재난 시나리오 설계 및 훈련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 다국어 안전 정보제공 및 전달 채널 다변화 등

자료(출처) : 저자 작성.

2)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공통 실행 전략

- 앞서 제시한 세 가지 기본 방향은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걸친 운영 기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인식과 신뢰, 신뢰와 실천 사이에는 단계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 사이의 격차(0.416 점)는 현재 정책이 시민의 행동 변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시민이 정책을 알고 있음에도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함에도 실행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수용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실행 전략은 단순히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기본 방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인천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확인($r=0.495$, $p<.01$)되었으므로 정책 신뢰 기반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재난안전 인식 제고와 실천 장벽 완화를 연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1) 위험 인식 제고 및 위험 소통 강화

- 재난안전 의식(3.489점)이 평균 이상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인식 제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확한 위험 소통과 지역·대상별 체감도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① 대상별 맞춤형 위험 소통

- 연령, 거주기간, 생활조건에 따라 정보 접근 채널과 메시지 수용 방식이 다르므로 대상별 채널과 콘텐츠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
- 청년층(20~30대)의 경우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SNS나 유튜브 쇼츠 등 짧은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길고 설명적인 콘텐츠보다는 30초 내외의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웹툰 형식의 스토리텔링 등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자발적 공유를 유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년층(40~50대)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이메일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수신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직장과 가정을 동시에 고려한 실용적인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함.
 - 직장 내 의무교육과 연계한 재난안전 교육, 온라인 강좌와 체크리스트를 결합한 형태의 콘텐츠는 시간적 제약이 큰 경제활동 인구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고령층(60대 이상)은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마을 방송,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활용한 대면·반복 중심의 소통 방식이 필요함.
 - 정기적인 경로당 방문 교육, 마을 단위 설명회 등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 학습의 장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이주민의 경우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역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되, 주요 재난 안내문과 행동 요령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팸플릿 형태로 병행 배포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통역 지원 인력을 활용하여 대면 설명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② 지역 맞춤형 재난 시나리오

- 일괄적 교육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로 체감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구별 주요 위험을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미추홀구는 최근 수년간 집중호우 시 도로 및 주거지 침수가 반복된 지역으로, 상습 침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피 경로 숙지 및 이동 훈련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임 (노재영, 2025).
 - 단순히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침수 가능 시간을 고려한 이동 동선 점검, 야간·고립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 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해상사고와 고립 도서 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기상 악화나 선박 결항 등으로 외부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도서 주민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나리오 설계가 중요함(신현보, 2025).
 - 통신 두절 상황에서의 비상 연락 체계, 마을 단위 응급구호 및 임시 대피 장소 운영, 해루질·낙시 중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주민 교육과 연계해 반복 훈련하는 방식이 요구됨.
- 남동구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화학물질 누출과 폭발 등 산업재해형 재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김정필, 2019; 허솔지, 2021).
 -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통해 인근 사업장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경보·대피 체계, 바람 방향·지형을 고려한 대피 경로 설정, 방재 인프라(차단 시설, 저류조 등)와의 연계를 포함하는 통합 훈련이 필요함.

- 부평구는 상권과 밀집 주거지가 혼재하고 골목길이 좁은 지역이 많아 소규모 화재가 다수 인명피해로 확산할 위험이 큼(최은지, 2016; 남용우, 2025).
 - 다가구·상가 밀집 지역과 먹자골목 등을 중심으로 골목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연기 확산 방향을 고려한 대피 요령, 차량·적치물로 인한 소방차 진입 지연에 대비한 자력 대피 훈련을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③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 형식적 강의 중심의 교육은 실제 행동 전환과 대응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험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생활권에서 반복·정례화되는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류현숙, 2025).
- 지진, 침수, 화재 등 주요 재난 상황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VR·AR 재난 시뮬레이션을 확대·도입하여, 시민이 위협의 심각성과 올바른 대응 요령을 몰입감 있게 학습하도록 해야 함(강내영, 2022; 김영숙·문광수, 2022).
 - 이를 위해 기존 관내 안전체험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별로 순회하는 이동형 VR 체험 버스를 확대·운영해 체험 교육 기회가 적은 지역 주민과 청소년까지 교육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음.
- 생활공간과 밀접하게 연계된 소규모 훈련 프로그램의 정례화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아파트 단지별로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의 소규모 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 대피 경로와 소화기 사용법을 반복적으로 숙지하도록 함.
 - 학교 단위에서는 지진 대피훈련을 통해 책상 밑 대피, 운동장 집결 등 기본 행동 요령을 체득하게 할 수 있음.
 - 직장에서는 사업장 특성에 맞춘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함.
- 연령과 생애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험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함(장관섭, 2025).
 - 영유아에게는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놀이형 안전 체험을 제공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재·실종 예방 등 기본 안전 습관을 익히게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에게는 학교 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심폐소생술, 재난 대피 등 보다 실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성인은 직장과 지역 단위를 기반으로 실제 재난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을 강화해야 함.
- 노년층의 경우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한 생활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낙상 예방, 화재 초기 대응, 폭염·한파 대비 등 일상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신뢰 기반 구축

-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사이의 높은 상관성($r=0.495$, $p<.01$)은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중추적인 연결 고리로 해석할 수 있음.
-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 완화 정책에 대한 순응과 예방 행동 참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강서운·이숙중, 2022; Bundi & Pattyn, 2023; Sarracino et al., 2024), 이는 재난 상황에서 경보 준수, 대피 명령 이행, 교육·훈련 참여 의사 등 다양한 행동 지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인천시의 재난안전 정책이 시민의 실제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한다면 정보제공이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이 정책의 정당성과 역량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정책 신뢰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정책 신뢰를 높이는 것은 여러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시민 실천을 촉발하고 지속시키는 전제 조건이자, 인식-신뢰-실천으로 이어지는 정책 수용성 구조의 출발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

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정책 발표 이후 공시 중심의 소통만으로는 “왜 이 정책이 필요한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에 대한 시민의 이해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초기 단계부터 참여와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함(류현숙, 2025).

- 주민참여 기반의 재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군·구 및 지역사회 단위의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음.
 - 협의체는 동 단위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상인회 등에서 추천된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재난·도시·건축 분야 전문가, 시민·자원봉사단체, 재난 관련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운영은 정책이 결정된 이후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가 보장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정례 회의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협의체 의견이 실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시가 명시적으로 공개하는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상시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 재난안전 모니터단’을 연계 운영하거나, 기존 유사한 성격의 단체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시민이 모바일 앱,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는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축적된 제보 데이터를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병행하여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수렴된 의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책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② 정책 집행의 가시성 제고

- 예방 정책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가 체감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이는 신뢰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책 집행 과정과 성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공개하는 방식에서의 전환이 요구됨(오윤경, 2025).
-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재난 관련 정보와 정책 성과를 시민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시민 재난안전 정보 포털을 개편하여 실시간 재난 경보 현황을 비롯해 군·구별 재난 대응 유관기관 현황, 구조 인력 규모, 대피소 분포 등 재난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재난안전 예산의 연도별·월별 집행 추이와 군·구별 집행 현황을 시각화하여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화재 발생 건수, 인명 피해 감소율 등 정책 성과를 정량 지표로 제시하고, 시민 안전 신고 건수와 처리율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응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집행 관련 성과 보고회의 정례적 운영을 도입하고,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성과 보고회에서는 각 군·구의 주요 재난안전 사업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를 설명하고, 주민 질의응답과 개선 요청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침수, 화재 등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재난을 중심으로 경제적·정량적 효과를 제시할 경우, 정책 성과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난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③ 데이터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 과장 또는 공포 중심 메시지는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중심 설명을 통해 정확한 위험 인지와 정책 신뢰를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정지범, 2025).
- 특히 시설 설치와 같은 갈등 가능 정책에서는 “왜 이곳인가”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이동규, 2025).
- 현재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재난 위험 소통 방식은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포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시민의 불신과 피로감을 누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김현정·한미정, 2014).
 - 재난 관련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메시지의 신뢰성과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위험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는 점 역시 중요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재난 위험 소통은 과장이나 공포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데이터 기반 설명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과거 재난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기존 시설의 처리 한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 추세 등을 지도와 그래프 등 시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필요성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Hu et al., 2024).
- 이러한 방식은 시민의 불필요한 불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험 인식과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 정책 실패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실패 또는 미흡 사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면 정책 불신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사후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화가 필요함.
- 또한 실패 사례가 사회적 학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재난·안전 사고 이후 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결과 중심의 사후평가 체계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 발생 시 단순히 피해 규모나 조치 결과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정책이 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여 원인 분석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접근이 요구됨.
 -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사후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때는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기준·절차·시설·조직 운영 방식 등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실패 사례를 단순한 행정 책임의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학습의 도구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실패의 원인과 한계를 축적·공유함으로써 유사한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복을 방지하고, 정책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이러한 개선 조치의 이행 과정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주민 모니터단이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사후평가가 행정 내부의 자체 점검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관점에서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시민 실천 활성화 및 실행 장벽 완화

- 분석 결과 전반적인 재난안전 시민 실천도(2.968점)가 다른 지표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화군·웅진군과 같이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음에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II유형의 사례가 확인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정책 신뢰를 제고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실천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고 시민이 재난 위험을 인지하고 정책을 신뢰하는 상태가 실질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일상적·물리적 제약 요인을 함께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따르면 재난 대비 행동은 태도와 신뢰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실천을 제약하는 물리적·경제적·시간적·정보적 장벽을 입체적으로 완화하는 접근이 요구됨.

① 경제적 장벽의 완화

- 경제적 장벽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손전등·비상식량·구급함 등 기본적인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노후 주택의 내진 보강이나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보조금,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보험료 일부 지원과 같은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은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준비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던 가구의 구조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실천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② 접근성 장벽의 완화

- 물리적·접근성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대피소를 확충하고 교통 여건을 보완하여 대피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교육 플랫폼을 구축·내실화할 필요가 있음(Ng, 2022).

○ 이와 함께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안전 점검 서비스를 도서·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정기 운영할 경우,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대비 행동이 지연되던 지역의 실천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③ 시간 장벽의 완화

○ 경제활동 인구가 겪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교육(평일 저녁, 토요일 오전 등)을 확대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5분 이내로 학습할 수 있는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³⁾ 형식의 재난안전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또한 학교나 직장 단위의 기존 의무교육 시간에 재난안전 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집단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 교육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

④ 정보 장벽의 완화

○ 정보 장벽 완화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그림 중심의 쉬운 안내서와 다국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각 가구가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A4 한 장 분량의 행동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카카오톡 알림톡 등 모바일 채널을 활용하여 재난 관련 핵심 정보와 준비 행동을 월 2회 내외로 정기 발송할 경우, 고령층과 이주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실천 절차에 대한 정보 부재가 실제 재난 대비 행동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⑤ 동기 장벽의 완화

○ 실천 촉진을 위한 동기 부여 측면에서는 우수 실천 가구를 선정해 소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교육 참여와 위험 요소 신고 시 포인트를 적립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안전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Najafi et al., 2017).

3) 정효정(2019)은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을 “작은 단위의(small learning unit), 짧은 길이의(short-term),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digestible) 학습 콘텐츠 혹은 학습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미 실행 중인 '재난안전전시회'와 같은 플랫폼에 동 단위 재난안전 경진대회 콘텐츠를 추가하여 지역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우수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재난안전 실천도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추진 체계 및 단계별 계획

- 정책 수용성 제고 실행방안은 단일 사업이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단계에 걸친 추진 체계와 로드맵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사업의 추진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 목표·과제·예산을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추진 주체 및 역할 분담

- 인천시는 재난안전 정책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광역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10개 군·구에서 추진되는 관련 사업을 조정·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
 -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배분하는 한편, 재난안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광역 단위에서의 조정·지원 기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유형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현장 집행 주체로서, 지역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육·훈련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담당함.
- 중간지원조직은 정책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과 연차별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근거 기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지원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함.
- 주민조직은 재난안전협의체와 시민 모니터단 활동, 각종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일상 속 실천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과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피드백의 핵심 주체 역할을 담당함.

[표 4-7]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주요 기능	세부 역할
인천시	광역 컨트롤 타워	정책 총괄·조정 및 행·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안전 정책 기본 방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광역 예산 배분 및 조정 군·구 사업 간 조정 및 연계 관리 재난안전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군·구	현장 집행 주체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구 유형별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 운영 지역 단위 교육·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 실행 주민과의 직접 소통 및 현장 대응
중간지원조직	전문 지원 조직	컨설팅·분석·평가 및 정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수행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군·구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정책 고도화를 위한 연구 지원
주민조직	실천 및 피드백 주체	참여·실천·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속 재난안전 실천 주체 역할 수행 재난안전협의체 및 시민 모니터단 참여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의견 및 현장 정보제공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공동체 기반 안전문화 형성

자료(출처) : 저자 작성.

(2) 단계별 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 전략은 단기적 ‘신뢰 형성 단계’, 중기적 ‘행동 유도 단계’, 장기적 ‘안전문화 정착 단계’로 구분하여 설정함.
- 각 단계는 목표, 주요 과제, 성과지표를 명확히 구분하되, 개별 단계가 단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책 신뢰 형성·행동 전환·문화 정착으로 점진적으로 축적·확장되는 구조로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① 단기 계획: 신뢰 형성 단계

- 단기적으로는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과 실행 기반 구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취약 요인을 재점검하고,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 데이터 기반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난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현황, 주요 성과를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군·구별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재난안전 모니터단을 운영·내실화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간의 상시적 피드백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단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조직적 기반 구축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실천도 역시 초기 상승 국면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후 단계로의 확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② 중기 계획: 행동 유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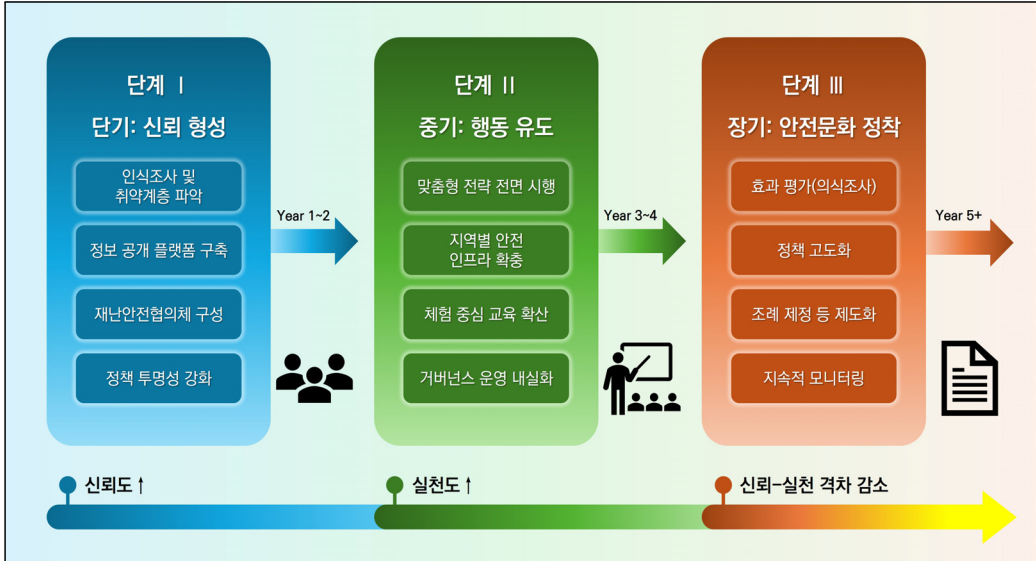
- 중기적으로는 유형별 맞춤형 실행 전략을 본격화하고, 시민 실천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를 수행함.
 - 강화군·웅진군 등 고신뢰·저실천형 지역과 미추홀구·부평구 등 저신뢰·저실천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개선을 추진함.
 - 이와 동시에 VR 기반 재난 체험,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생활밀착형 훈련 등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주민참여형 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실행력을 강화함.
 - 또한 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중간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와 한계를 점검함으로써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함.
- 이 단계에서는 정책 신뢰도의 추가적 상승과 함께 시민 실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 참여 확대와 유형 간 상향 이동이 관찰되는 것을 주요 성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③ 장기 계획: 안전문화 정착 단계

- 장기적으로는 재난안전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자율적 안전문화로 정착시키는 단계로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시민 참여형 리빙랩 프로젝트를 정례화하여 주민이 지역의 재난 문제를 직접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검증하는 구조를 구축함.
 - 또한 마을 단위 자율 재난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행정 주도의 관리 방식에서 공동체 기반 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재난안전 의식 제고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끝으로 재난안전 의식조사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신뢰도와 시민 실천도의 격차가 실질적으로 축소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 단계에서는 재난안전이 일상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지속되는 안전문화의 정착을 핵심 성과로 설정함.

[그림 4-1]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로드맵



자료(출처) : 저자 작성.

[표 4-8]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 단계별 로드맵

구분	주요 과제	성과지표 예시
단기 (신뢰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식조사 및 취약계층 파악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협의체 구성 시민 모니터단 운영 정책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 플랫폼 구축 완료 여부 협의체 구성 여부
중기 (행동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전략 전면 시행 지역별 안전 인프라 확충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 확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좋은 거버넌스 구축·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 교육 참여율 제고 군·구 유형별 상향 이동 여부
장기 (안전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 평가(의식조사 등) 정책 고도화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리빙랩 프로젝트 정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 신뢰-실천 격차 감소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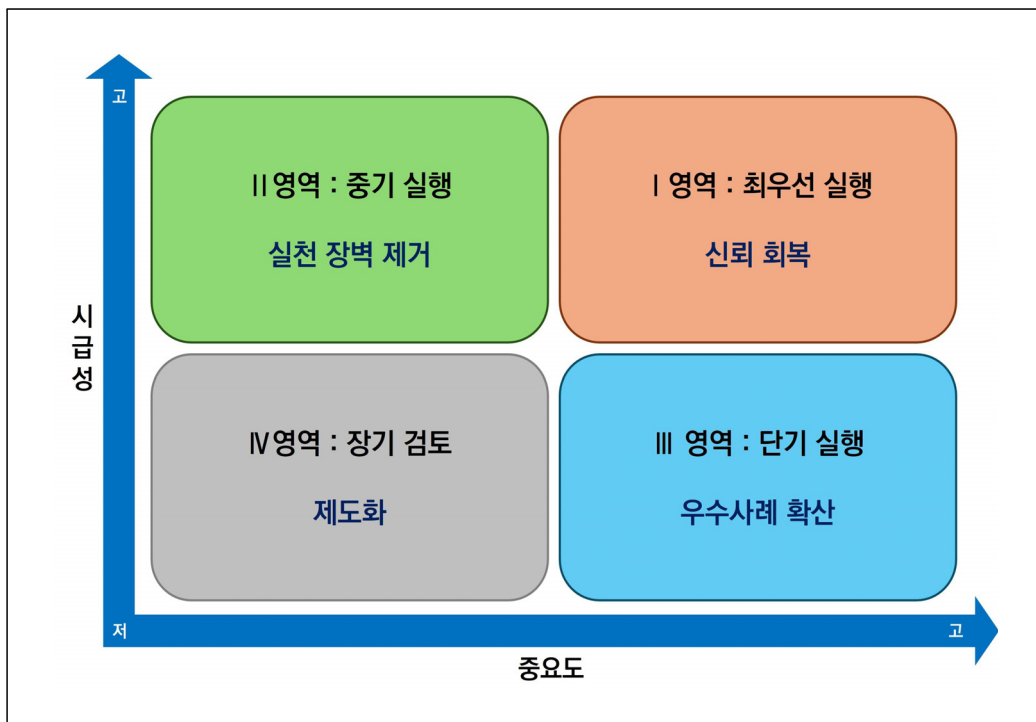
자료(출처) : 저자 작성.

(3) 우선순위 매트릭스

- 한정된 행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시급성과 중요도를 함께 고려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재난안전 인식·정책 신뢰·시민 실천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자치구 유형과 제도 개선 과제를 네 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과제별로 단계적인 전략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음.
- I 영역에는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 저신뢰·저실천형(III유형) 지역이 해당함.
 - 이들 지역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아 시급성과 중요도가 동시에 높은 최우선 개입 대상임.
 - 반복적인 재난 경험과 정책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 사업 도입 및 집중적인 정책 자원 투입을 통해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전략이 요구됨.
- II영역에는 강화군과 옹진군 등 고신뢰·저실천형(II유형) 지역이 포함됨.
 - 이들 지역은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은 비교적 확보되어 있으나,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천 장벽이 큰 특성을 보임.
 - 따라서 시급성은 높고 중요도는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며, 대피소 접근성 개선, 이동형 안전 서비스 도입, 시간·비용 부담 완화 등 실행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적절함.
- III영역에는 동구, 연수구, 서구 등 고신뢰·고실천형(I유형) 지역이 속함.
 -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정책 작동 수준이 양호하여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으로 판단됨.
 - 해당 지역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사업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전략이 중심이 됨.
- IV영역은 조례 제정, 조직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시급성은 낮으나 중간 수준의 중요도를 가진 장기 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영역은 단기 및 중기 단계에서 축적된 정책 경험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난안전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러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는 단순한 유형 분류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재난안전 정책의 예산 배분이나 사업 선정과 같은 실무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동일한 자원이라도 모든 군·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사안에 행정 역량을 우선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지표가 안정적인 영역은 기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체계는 앞서 살펴본 정책 수용성 제고 원칙과 향후 전개될 유형별 실행 전략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가교가 되며,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2] 재난안전 정책 우선순위 매트릭스



자료(출처) : 저자 작성.

3.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

- 앞서 제시한 공통 실행 전략은 인천시 전역에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수 있음.
- 다만 군·구별로 사회·경제적 조건, 재난 위험 노출 수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정책 수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정책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재난안전 분야에서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역사회가 자신의 취약성과 역량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임.
- 따라서 2절에서 도출한 유형별 형성 요인을 바탕으로 군·구별 차별화 실행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순 분류를 넘어 각 유형의 강점은 유지·확대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는 맞춤형 처방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하에서는 네 가지 유형별로 핵심 과제, 우선 적용 전략, 유형 특화 전략,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1) I 유형(고신뢰·고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I 유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정책 작동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연수구·서구는 신도시 지역으로 교육·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전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하여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기반이 비교적 견고함.
- 동구는 원도심이라는 물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결속력이 유지되어 정책 수용성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표본 수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동구에 대한 해석은 탐색적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들 지역의 핵심 과제는 높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정책 효과의 정체를 방지하고 신도시 지역에서 전입 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체 약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 또한 축적된 정책 경험과 우수사례를 체계화하여 다른 유형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제도 중요함.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I 유형에서는 공통 전략 중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를 우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인 신뢰와 실천이 확보된 만큼 주민참여형 재난안전협의체의 역할과 정책 반영 경로를 명확히 하고, 정책 설계·평가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동구처럼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은 주민자치회, 통·반장 네트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기존 조직을 재난안전 거버넌스에 공식적으로 연계하여 공동체 기반의 상호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음.
- 연수구·서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은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

(3) 유형 특화 전략

- I 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우수사례의 표준화 및 체계화가 필요함.
 - 연수구와 서구에서 운영 중인 재난 대응 체계, 교육 프로그램, 주민참여 방식 등을 정리·매뉴얼화하여 '인천형 재난안전 우수모델'로 발전시키고, 타 군·구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 축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 협의체 운영 사례, 교육 콘텐츠, 훈련 시나리오를 DB화하고, 정기적인 공유·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간 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음.
- 둘째, 공동체 기반 상호 협력 체계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구와 같이 공동체 결속력이 높은 지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통·반장 조직과 연계한 '(가칭)안전지킴이' 활동을 공식화하여 취약계층(고령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점검·지원 체계를 지역 단위로 강화할 수 있음.
 - 연수구·서구 등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정기 훈련을 운영하는 자율안전관리 모델을 시범화하여 확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세대·계층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 지역의 전입 인구 증가로 공동체성이 약화할 수 있으므로 세대 간 공동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 안전 봉사단과 고령층을 연계한 멘토링, 신규 입주자 대상 안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지역 구성원 전체가 공통의 행동 기준을 공유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I 유형은 신뢰·실천 수준의 안정적 유지, 우수사례의 체계적 확산, 공동체 기반 자율안전관리의 정착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신뢰도 및 실천도의 안정적 유지, ② 우수사례 DB 구축 건수 및 확산·벤치마킹 건수, ③ 협의체 의견의 정책 반영률, ④ 자율방재단 구성 비율, ⑤ 신규 전입자 안전 오리엔테이션 참여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II유형(고신뢰·저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II유형은 정책 신뢰 수준은 비교적 높으나 시민 실천이 저조한 유형임.
- 이는 정책 수용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고령 인구 비율, 거주지 분산, 도서 지역의 지리적 고립 등으로 인해 교육 참여와 대비 행동의 접근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으로 해석됨.
-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 비추어 보면, 신뢰와 태도는 형성되어 있어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지각된 행동 통제감)이 낮으면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유형의 핵심 과제는 신뢰 회복보다 실천 장벽 제거에 있음.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II유형은 공통 전략 중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층과 도서 주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교육·점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고려하여 대면·반복 중심의 소통 채널을 병행해야 함.
- 마을 방송, 경로당, 이장단 네트워크 등 기존 지역 인프라를 정책 전달 체계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3) 유형 특화 전략

- II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네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이동형 안전 점검·교육 서비스의 정례화가 필요함.
 -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가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과 교육을 결합하는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읍·면 단위 순회 일정과 대상 가구 사전 발굴 체계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커뮤니티 기반 아날로그 소통 강화 및 반복 교육이 요구됨.
 - 고령층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숙지·실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월 1~2회 수준의 반복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참여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셋째, 도서 지역의 자생적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외부 지원 지연 가능성을 전제로 응급구조 세트 비치, 분기별 자체 훈련, 통신 두절 대비 비상 연락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해루질·낚시 등 생활 활동 중 사고 대응 요령을 교육·훈련에 포함하는 방식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넷째, 교통 접근성 개선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병행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날·행사 일정과 교육을 연계하거나 셔틀 운영 등을 통해 참여 부담을 줄이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다층적으로 확보해야 함.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II유형은 교육 이수율과 가구 단위 준비 수준의 개선, 도서 지역 자체 대응 역량 강화, 실천 저조 구조의 완화 및 유형 상향 이동 가능성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취약지역 교육 참여율·이수율, ② 안전용품 비치율, ③ 이동형 점검 서비스 제공 가구 수, ④ 마을 단위 자체 훈련 횟수, ⑤ 응급구호 세트 비치 마을 수, ⑥ 시민 실천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III유형(저신뢰·저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III유형은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이 모두 낮아 우선순위 매트릭스에서 시급성과 중요도가 가장 높은 최우선 개입 대상임.
- 원도심 노후화, 높은 인구 밀집, 반복적인 침수·화재 등 생활안전 사고 경험이 누적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강화되고 제도적 신뢰가 약화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Slovic(1987)의 논의처럼 부정적 경험의 반복은 위험을 과대 인식하게 하거나 무력감·체념으로 인해 행동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음.
- 따라서 이 유형의 핵심 과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음.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III유형은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과 정책 집행의 가시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왜 위험한가”, “어떤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동시에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침수·화재 등 체감도가 높은 재난을 중심으로 과거 피해 데이터, 현 시설의 한계, 투자 효과 예측 등을 지도·그래프로 제시하고, 대시보드 등을 통해 예산 집행, 사업 단계,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함.

(3) 유형 특화 전략

- III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현안 해결형 ‘(가칭)우리 동네 안전 리빙랩’과 같은 프로젝트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이 위험 지점을 발굴하고 전문가·행정과 함께 소규모 개선사업을 실행·평가하는 구조를 통해 주민이 전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추홀구는 상습 침수 중심의 리빙랩, 부평구는 골목길 화재 안전 중심의 리빙랩 등으로 주제를 명확히 하여 시범 운영 후 확산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체감형 안전 인프라의 가시화와 집중 투자가 요구됨.
 - 주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소규모·고빈도 개선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침수 위험 알림 체계(센서·알림), 노후 주거지 화재감지기 무상 설치 등 생활권 단위 투자를 추진하고, 사업 전후 비교 자료(사진, 수치, 범위)를 공개하여 가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실패에 대한 설명과 재발 방지 약속의 이행을 통해 신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과거의 미흡 사례를 숨기기보다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를 중심으로 원인 분석과 개선 조치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III유형은 효능감 회복과 신뢰도 상승, 실천도 개선 및 유형 상향 이동 가능성, 공동체 협력 회복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정책 신뢰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② 리빙랩 참여자 수 및 해결 과제 수, ③ 사전·사후 인식 변화, ④ 체감형 인프라 완료 건수, ⑤ 주민 만족도 및 관련 민원 변화, ⑥ 시민 실천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4) IV유형(저신뢰·고실천형) 실행 전략

(1) 유형 특성 및 핵심 과제

- IV유형은 시민 실천은 높으나 정책 신뢰가 낮은 유형임.
- 항만·공항·산단 등 위험 시설 인접 특성으로 인해 주민이 제도 신뢰와 무관하게 개인 차원의 대비와 행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Bachmann과 Zaheer(2006)의 신뢰 유형 구분에 비추어 보면 개인 역량에 대한 신뢰는 높으나 제도적 신뢰가 낮은 비대칭 구조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정보 비대칭과 소통 부족은 불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이 유형의 핵심 과제는 현재의 실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강화하여 제도적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음.

(2) 우선 적용 공통 전략

- IV유형은 데이터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위험 인식과 자체 대응 경험은 높은 편이므로 추가 실천 유도보다 정책 결정의 근거, 의견 반영, 대응체계의 합리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산단 등 고위험 지역은 위험도 평가, 비상대응 계획, 대피 경로 설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유형 특화 전략

- IV유형의 특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첫째, 산업·물류 특화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위험 시설 운영 주체와 행정,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위험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공동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남동구는 산단 안전 거버넌스 협의체, 중구는 항만 안전 협의체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둘째, 다문화·외국인 안전 정보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됨.
 -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다국어 안내자료, 커뮤니티 리더 기반 전달 체계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정책 결정 근거의 시각화 공개와 주민 질의응답 체계의 정례화가 필요함.
 - 비용·편익 분석, 대안 검토 과정, 자문 결과 등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분기별 설명회 및 질의응답 기록 공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 IV유형은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제도적 신뢰 회복, 위험 시설 운영 주체와 주민 간 협력 기반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주요 효과로 설정할 수 있음.
- 성과지표로는 ① 정책 신뢰도 점수의 직전 조사 대비 증가, ② 특화 협의체 운영 횟수 및 참여율, ③ 정책 결정 과정 공개 건수 및 질의응답 건수, ④ 다국어 정보제공 및 외국인 교육 참여율, ⑤ 절차 공정성 인지도, ⑥ 실천도 유지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표 4-9] 인천광역시 군·구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

구분	I 유형 (고신뢰·고실천형)	II 유형 (고신뢰·저실천형)	III 유형 (저신뢰·저실천형)	IV 유형 (저신뢰·고실천형)
대상 지역	연수구, 서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남동구, 계양구
핵심 과제	우수사례 체계화 및 전파	실행 장벽 제거	정책 신뢰 회복	절차적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우선 전략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	근거 기반 투명 행정 및 가시성	데이터 기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특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형 우수모델 DB화 • 안전지킴이 활동 제도화 • 세대·계층 연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이동형 점검·교육 • 아날로그 소통 채널 강화 • 도서 지역 자생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리빙랩 • 체감형 인프라 집중 투자 • 실패사례 설명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물류 특화 거버넌스 • 다문화·외국인 사각지대 해소 • 정책 결정 근거 시각화 공개
성과 지표	우수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 건수	취약지역 교육 이수 및 용품 비치율	정책 신뢰도 및 실천도 상승폭	절차 공정성 인지도 및 정보 공개 건수
정책 의미	성과 확산 및 관리	실천 장벽 완화	최우선 집중 개입	소통 및 제도적 신뢰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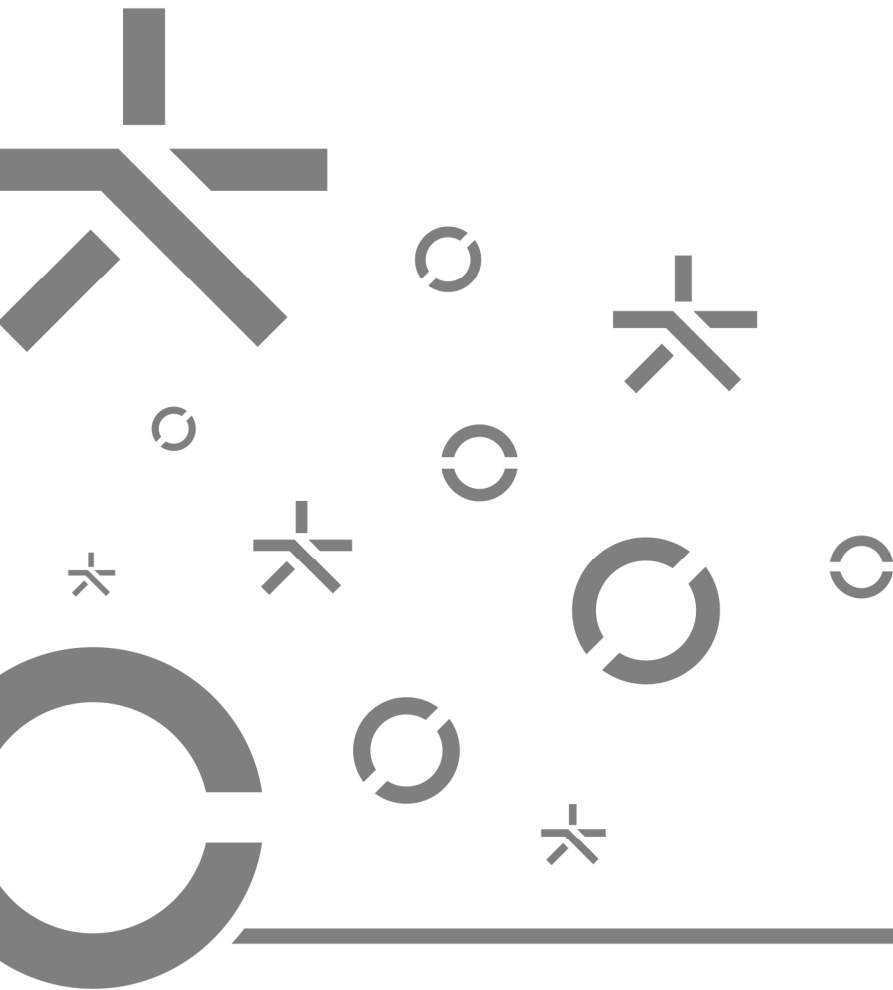
자료(출처) : 저자 작성.

4. 소결

- 본 장에서는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의 구조적 특성을 진단하고, 정책 전환의 방향과 군·구별 맞춤형 실행 전략을 정리하였음.
- 분석의 핵심은 재난안전 인식 제고만으로는 시민의 행동 변화를 충분히 이끌기 어렵고, 정책 신뢰의 형성과 실천 여건의 개선이 함께 작동할 때 정책 수용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 있음.
- 첫째,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안전 인식 수준에 비해 시민 실천 수준이 낮게 나타나 기존의 교육·홍보 중심 접근이 행동 전환 단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특히,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r=0.495$)가 확인된 점은 향후 재난안전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축적·관리하는 정책 운영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시민이 정책을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정당성과 실행 역량을 신뢰할 때 공공의 권고가 일상적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함.
- 둘째,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근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 시민 주도형 참여 거버넌스, 수요자 맞춤형 체감도 제고로 제시하였음.
 - 이를 실행 단계로 연결하기 위해 단기(신뢰 형성), 중기(행동 유도), 장기(안전문화 정착)의 단계별 로드맵과 함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제시함으로써 한정된 행정 자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셋째, 군구별 유형화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른 정책 작동 방식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실행 전략을 제안하였음.
 - I 유형(고신뢰·고실천형)은 신도시의 제도·서비스 접근성과 원도심의 공동체 자본을 활용하여 우수사례를 체계화하고 확산하는 전략이 적합함.
 - II 유형(고신뢰·저실천형)은 신뢰 부족보다 지리적·신체적·정보적 제약에 따른 실천 장벽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접근성 개선과 실행 여건 보완이 우선되어야 함.

- III유형(저신뢰·저실천형)은 가시적인 인프라 개선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출되었음.
 - IV유형(저신뢰·고실천형)은 주민의 자생적 실천을 토대로 정책 결정 과정의 설명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대칭적 신뢰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 이러한 유형별 접근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전략적 토대이며, 이를 통해 각 군·구의 특성에 최적화된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음.
- 종합하면,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 수용성 제고는 광역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군·구의 현장 집행력,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 본 장에서 제시한 유형별 실행 전략과 성과지표를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적용·관리한다면 인식과 실천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하는 회복력 있는 안전도시 인천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



결론

1. 연구 결과의 종합

- 본 연구는 2024년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정책의 수용성이 어떠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제약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군·구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특히 재난안전 정책이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음.
-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시민의 재난안전 인식 수준 제고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인식이 실천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구조적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는 기존 재난안전 정책이 전제해 온 ‘인식 제고 → 행동 변화’라는 단순한 선형 논리가 현실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첫째,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과 시민 실천 간에는 간극이 나타났음.
 - 분석 결과, 재난안전 의식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민 실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시민이 위험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을 의미함.
 - 다시 말해, 재난안전 대비 행동의 부족은 개인의 무관심이나 책임 회피의 문제라기보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정책 환경의 문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정책 신뢰는 인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재난 대비 행동 역시 상대적으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신뢰가 실천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충분조건이라기보다 실천이 가능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에 가깝다는 점에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
 - 즉, 정책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동 유도가 거의 작동하지 않지만,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실천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음.
- 셋째, 군·구별로 정책 수용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이 일률적 접근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 원도심 지역에서는 반복적인 재난 및 안전사고 경험과 정책 피로감이 신뢰와 실천 모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도서·고령화 지역에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신체적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실천이 저조한 양상이 나타났음.
 - 신도시 지역은 전반적인 정책 작동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향후 공동체 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결과는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일한 정책 메시지나 동일한 정책 수단의 반복적 적용이 정책 효과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 종합하면,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책 신뢰를 기반으로 실천 조건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동시에 군·구별 사회적·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 수용성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이상의 시사점은 차후 제시할 정책제언의 핵심적인 논리적 토대가 되며,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과제들을 해소하고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2. 정책제언

- 본 절에서는 인식과 실천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정책제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함.
- 시민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천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정책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시민의 자발성에 과도하게 기대기보다 행정이 신뢰를 구축하고 실천 조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참여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자 함.

1) 정보 전달 위주에서 체험·교육 위주의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재난안전 정책의 접근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기존 정책은 재난 대응 요령과 안전 수칙을 충분히 제공하면 시민의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시민들이 위험을 몰라서 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험적 경험이 부족해서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재난안전 정책이 ‘안전 정보(safety information)’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접하고 체득할 수 있는 ‘안전 경험(safety experience)’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이를 위해 재난안전 교육을 별도의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동선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디스플레이, 지하주차장, 전통시장과 같은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짧고 직관적인 행동 중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거나, 지역 행사와 연계한 상설형 체험 콘텐츠를 통해 시민이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응 행동을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이 가능함.

- 이러한 넛지(nudge)⁴⁾형 접근은 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과 중심의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집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재난 예방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Tyler(2006)의 절차적 정의 이론에 따르면, 시민은 정책의 성공 여부보다 행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신뢰를 형성함.
-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안전 정책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설 점검 주기와 개선 조치 현황, 예산 집행 과정 등을 시각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대응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 이는 시민에게 정책의 존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음.

3) 취약계층 안전 복지 실현을 위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 시민 실천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서는 개인의 책임에 기반한 접근을 넘어 행정이 실천 조건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확인된 II유형과 III유형 지역의 경우, 정책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 접근성, 시간 부담과 같은 현실적 제약이 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4) 강준만(2016)은 넛지가 본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Thaler와 Sunstein에 의해 ‘부드러운 개입을 통한 선택 유도’라는 개념으로 격상되었다고 설명함. 또한 넛지의 본질을 현대 PR의 아버지 Bernays가 실천했던 ‘간접적 수단의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였음.

- 이는 Ajzen(1985)의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지각된 행동 통제감’의 문제로, 실천의 의지가 있더라도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낮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이러한 맥락에서 재난 대비를 개인의 준비 역량에만 맡기기보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실천 조건을 보완하는 ‘인천형 안전 돌봄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는 고령층과 원도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등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비상 대비 물품 점검, 화재감지기 교체, 맞춤형 대피 경로 안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발성 물품 지급이 아닌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결합한 모델임.
- 이러한 접근은 도서 지역의 접근성 문제와 원도심 지역의 신뢰 회복 과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4) 지속가능한 안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 시민참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참여의 양을 확대하는 것보다 참여의 질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재난안전 분야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상징적 거버넌스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이는 참여 과정에서 시민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에 따른 효능감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임.
- Arnstein(1969)의 참여의 사다리 이론⁵⁾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참여 방식은 정보제공이나 자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음.

5) Arnstein(1969)은 시민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 ‘참여의 사다리(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을 제시하였음. 이 이론에 따르면 시민참여는 조작(manipulation)과 치료(therapy)를 포함하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단계, 정보제공(informing)·상담(consultation)·회유(placation)를 포함하며 의견 수렴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한 명목적 참여(tokenism) 단계, 그리고 파트너십(partnership)·권한위임(delegated power)·시민통제(citizen control)를 통해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권력(citizen power) 단계로 구성됨. Arnstein은 하위 단계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민권력 단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 앞으로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협력과 권한위임 단계로의 이행이 필요함.
- 특히 본 연구에서 최우선 개입 대상으로 도출된 III유형 지역에서는 ‘우리 동네 안전 리빙랩’과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주민이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시민을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위치시킴으로써 신뢰와 실천을 동시에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5)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

- 2026년 7월로 예정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⁶⁾은 재난안전 정책의 관점에서 위기가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구역 신설과 경계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인 안전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동시에 새로운 안전 거버넌스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함.
- 특히 영종구와 같이 항만·공항이라는 특수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나, 검단과 같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앞서 제시한 유형별 전략을 초기 행정 설계 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안전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기적인 조직 재편을 넘어 중장기적 정책 수용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6) 인천광역시 1995년 이후 유지해 온 행정체제를 31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새롭게 출발함. 이번 개편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동의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민 편의와 생활권 일치를 위해 추진됨. 세부적으로는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섬 지역을 ‘영종구’로 신설하며, 서구는 경인 아래벚길을 경계로 남북을 분리하여 각각 ‘서해구’와 ‘검단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인천광역시청 누리집. <https://www.incheon.go.kr/IC010701>. 검색일 : 2025년 12월 23일).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님.
- 첫째, 표본 설계 측면에서 군·구별 비교를 위한 최소 표본을 확보하였으나, 일부 군·구의 경우 표본 수가 제한적이어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유형 분류 결과는 정책 설계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계적인 순위화나 단정적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표본 확대를 통한 보완 분석이 요구됨.
-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의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책 개입 전후의 변화를 추적하지 못하였음.
 - 정책 신뢰와 시민 실천 간의 관계가 인과적인지, 또는 상호 강화 관계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단계별 정책이 실제로 신뢰와 실천의 격차를 축소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향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임.

주제어 ▶ 지역위험, 재난안전의식, 정책신뢰, 시민실천, 정책수용성

참고문헌

■ 단행본/연구보고서

- 안승현, & 조성윤. (2025).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인천연구원.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 11-39).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 Bachmann, R., & Zaheer, A. (Eds.). (2006). *Handbook of trust research*. Edward Elgar Publishing.
- Baldwin, R., Cave, M., & Lodge, M. (2012).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Douglas, M., & Wildavsky, A. (1983). *Risk and Culture: An Essay on the Selection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Dange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Earle, T. C., & Cvetkovich, G. (1995). *Social Trust: Toward a Cosmopolitan Society*. Praeger.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Wiley.
- OECD. (2016). *Trends in Risk Commun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7). *Trust and Public Policy: How Better Governance Can Help Rebuild Public Trust*. OECD Publishing.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Tyler, T. R. (2006). *Why people obey the law*. Princeton university press.

■ 학술지/학위논문

- 강내영. (2022). 가상현실 (VR) 재난안전교육에서 재난영화 내러티브 도입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5), 561-568.
- 강서윤, & 이숙종. (2022). 재난 상황에서 다면적 신뢰가 주관적 안전인식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코로나 19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1(1), 255-286.
- 강준만. (2016). 네티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론적 유형 분류: 공익적 설득을 위한 네티지의 활용방안: 공익적 설득을 위한 네티지의 활용방안. *한국언론학보*, 60(6), 7-35.
- 김수동, & 안승현. (2025). 정부신뢰와 재난안전 인식에 관한 연구: 재난 두려움의 매개효과와 재난 지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5(1), 121-153.

- 김영숙, & 문광수. (2022). 가상현실 기반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8(4), 713-728.
- 김영주, & 문명재. (2020). 재난관리 정부성과 인식과 정부신뢰가 일반시민의 사회재난 예방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4(1), 187-213.
- 김현정, & 한미정. (2014). 위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사회-기술적 재난에 대한 신문의 보도행태 분석: 구미 불산 누출 사례. *Crisisonomy*, 10(11), 21-53.
- 정효정. (2019). 기업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설계 및 구현.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9), 1771-1780.
-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Bouckaert, G., Van de Walle, S., & Kampen, J. K. (2005). Potential for comparative public opinion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1(2), 229-240.
- Bundi, P., & Pattyn, V. (2023). Trust, but verify? Understanding citizen attitudes toward evidence-informed policy making. *Public Administration*, 101(4), 1227-1246.
- Earle, T. C. (2010). Trust in risk management: A model-base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Risk Analysis*, 30(4), 541-574.
- Grelle, S., & Hofmann, E. (2023).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public policy accept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3(5), 1088-1104.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u, S., Zhou, J., Tang, L., Zhao, Y., & Xing, H. (2024). The impact of risk communication, trust, and coping appraisal on individual preparedness decisions in geological hazard-prone areas.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00, 104166.
- Kasperson, R. E., Renn, O., Slovic, P., Brown, H. S., Emel, J., Goble, R., Kasperson, J. X., & Ratick, S. (1988).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A conceptual framework. *Risk Analysis*, 8(2), 177-187.
- Levi, M., &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 Najafi, M., Ardalan, A., Akbarisari, A., Noorbala, A. A., & Elmi, H. (2017).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disaster preparedness. *PLoS currents*, 9, ecurrents-dis.
- Ng, S. L. (2022). Effects of risk perception on disaster preparedness toward typhoons: An application of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Science*, 13(1), 100-113.

- Lowi, T.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Sarracino, F., Greyling, T., O'Connor, K. J., Peroni, C., & Rossouw, S. (2024). Trust predicts compliance with COVID-19 containment policies: Evidence from ten countries using big data. *Economics & Human Biology*, 54, 101412.
- Siegrist, M., & Cvetkovich, G. (2000). Perception of hazards: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20.
-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4799), 280-285.
- Slovic, P. (1993). Perceived risk, trust, and democracy. *Risk Analysis*, 13(6), 675-682.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 Tyler, T. R.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375-400.

■ 보도자료/신문기사

- 노재영. (2025. 8. 31.). 인천 미추홀구,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선제적 예방대책 효과. *경기일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31580090>(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신현보. (2025. 6. 2.) 걸어 들어간 무인도서 밀물예 익사...법원은 “지자체 책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0297797>(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김정필. (2019. 10. 19.). 정부, 인천 남동공단 유독물 유출 석달전 '위험' 알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652939.html>(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하솔지. (2021. 9. 7.).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업체 대표 징역 1년.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74014>(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남용우. (2025.12.12.). 인천 부평 주상복합 화재...60대 남성 연기 흡입·150여 명 대피. *중앙신문*.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187790>(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최은지. (2016. 12. 10.). 인천 부평 먹자골목서 불·50명 대피·6명 연기 흡입. *연합뉴스*. <https://www.yona.co.kr/view/AKR20161210008400065?input=1195m>(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장관섭. (2025. 12. 15.). 인천 연수구, '직원·주민 참여' 지진 대응 자체훈련 실시로 대응역량 강화. *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51215/132966105/1>(검색일 : 2025년 12월 18일).

■ 행정자료

인천광역시. (2025). 제64회 인천광역시통계연보(2024).

■ 전자문서자료/홈페이지

인천광역시청 누리집. <https://www.incheon.go.kr/IC01070101>(검색일 : 2025년 12월 23일).

■ 인터뷰, 개인소장자료 등

강정묵. (2025년 12월 19일). 대면 인터뷰.

김수동. (2025년 9월 5일). 대면 인터뷰.

도명록. (2025년 11월 6일). 대면 인터뷰.

도명록. (2025년 12월 19일). 대면 인터뷰.

류현숙. (2025년 9월 30일). 대면 인터뷰.

오윤경. (2025년 8월 29일). 대면 인터뷰.

이동규. (2025년 12월 10일). 대면 인터뷰.

이상혁. (2025년 12월 9일). 대면 인터뷰.

정지범. (2025년 9월 30일). 대면 인터뷰.

2025년도 센터기획연구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발 행 인 최계운

발 행 일 2026년 1월 31일

발 행 처 인천연구원

인 쇄 처 032디자인(주) 032-777-7032

I S B N 979-11-6870-351-3 9335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 인천연구원 2025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